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 2014년 7월 9일(수) | 장소 | 서울대 소극장 | 주최 | 대한주택공사

**임대소득 과세 토론회 07.09**

**07.22 송현동 호텔건설 반대 기자회견**

**08.29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경실련 행진 및 공동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  
일시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속가능·형평성 공무원연금 개혁안향과 과제

**09.25 공무원연금 토론회**

**제2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경실련 좋은기업상 10.21**

경실련 25기(회)원 1차 정기총회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

**경실련 25주년 기획토론회 10.31**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1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경제사실연구소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기자회견 11.13**

**11.24 4지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촉구 기자회견**

경제사실연구소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일부러 일러버한 20년을 답습할 것인가?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초코 교육회관 212호 주최 | 경실련

**11.17 최경환 경제정책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소유지배구조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 경영권승계 토론회 11.27**

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12.12 상품권법 제정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평가 토론회  
**한국의 지방자치, 어디로 가는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토론회 12.22**



커버스토리

**영리병원, 의료체계 붕괴의 시작?**  
정부는 경제특구의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진료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은 이미 충분합니다. 소득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서 이전 의료양극화로 인한 의료 불평등까지 국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태룡 정책위원장 서순탁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삼수 김한기 남은경 윤철한 정지영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5년 2월 6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 CONTENTS

도시사

06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 하동익

동승동칼럼

08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 고계현

기획특집

- 10 ① 구청장·구의원, 이제는 내가 뽑을 수 없다? / 유애식
- 14 ② 경제특구 외국영리병원 추진의 허와 실 / 남은경

시사포커스

- 18 ① 서민주거안정은 나 몰라라, 건설사 지원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 최승섭
- 21 ② 북한 마지막 조갯살 40년만에 첫 선, 그 이후 / 홍명근
- 25 ③ 위기에 처한 서해도서 어민생계의 해법 / 허선규

통일마당

28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 김근식

안녕하세요? 회원님!

34 [인터뷰] 이동석 회원님  
NGO의 투명성 확립과 활동가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파 / 정지영

경실련 사람들

- 36 ① 지금이... 희망이다 / 정지영
- 40 ② [릴레이 인터뷰] 시민운동... 재미 있으니 하는 거죠 / 심재석
- 43 ③ 경실련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 이학린



**25** 시사포커스3  
위기에 처한 서해도서 어민생계의 해법



**28** 통일마당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지역이야기

46 제주는 지금... / 좌광일

문화산책

50 네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었어도 난... / 박지호

동승동 책방골목

- 52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게엔 경영권을! / 윤은주
- 53 '지금 여기만 아니라면 행복할거라 믿는 당신에게 / 이우연

경실련 주춧돌

54 회원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심재석

회원기고

56 국내 농업 '내외환'에 시름 잠겨... 돌파구는? / 이은용

편집자에게

60 초행길을 위한 보다 쉬운 지도가 됐으면... / 박상하

회원게시판

62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64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66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50** 문화산책  
네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었어도 난..



**54** 경실련 주춧돌  
회원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

#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하동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1위라던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는 오명을 가진 나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나 국민은 교통사고를 자동차 생활에 수반되는 당연한 현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혹은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1.5분마다 한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5시간마다 한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지난 30년 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 부상자만 집계하더라도 천만 명에 이른다. 우리 모두를 장애 발생의 잠재적 대상으로 하

는 교통사고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재난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2012년 통계청과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해 재난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는 16명, 추락, 익사, 화재, 유독물 등에 의한 사망자는 3,409명인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재난사고의 65%인 6,502명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 외에도 그 발생 양상이 매우 후진적 특성을 보인다는데 심각성이 더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다수가 생활권 주변의 보행자라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가 차도폭 9m 미만의 거주지 주변이나 통학로 등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문화에 기인한다. 자동차를 탄 상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평균치 3.0명보다 적은 2.5명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 1.4명보다 무려 3.1배 많다. 자동차 승차자에 비해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1988년을 전후한 자동차 급증기를 겪은 것은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간에 우리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실질적인 교통예산은 일본의 4% 수준이라고 지적한 어떤 국회의원의 발언도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한다.

1980년 대비 2010년도의 OECD 회원국 평균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년 기간 동안 64.3%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 28.4% 감소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최근 10년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의 감소율에 있어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선례를 볼 때 교통사고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





##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40%대로 철용성 같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칠 하고 있다. 올해는 집권 3년차로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선거도 없고 사실상 대통령 임기 중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마지막 시기다. 1년차는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문제로 2년차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정운영의 응집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대와 신뢰보다는 절망과 냉소가 가득하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보인 박 대통령은 ‘현실인식은 전혀 없고 국민들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어디 별나라에서 내려온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과는 완전 괴리된 모습이었다. 이전 새누리당 대표시절에 국민들과 공감하던 언행과는 전혀 판판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놓고 구중궁궐에서 내시들에 갇혀 세상물정 모르는 왕의 행태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절망과 냉소뿐이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년 동안 말은 요란했으나 내용이 없었고, 시작은 거창했으나 마무리는 미미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통일대박, 국가개조 등이 그러하다. 물가와 전월세 폭등으로 민생과 경제는 바닥이고 정치는 국민통합은커녕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며 정부여당 내 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실패로 국정운영의 구심과 방향타를 상실했다. 남북관계는 퐁퐁 얼어붙어 냉전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독재시대에 군림하던 공안검사들이 청와대 등 정부요직에 포진하여 정치적 비판세력에 대해 숨죽여 있을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까지 한국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되었는지 후회 내지 참담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면 확실히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다. 그러나 불행한 점은 박 대통령 스스로가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통령은 가리키려는 손만을 보며

응답한 연두기자회견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출신들이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 3인방 등이 국정을 전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을 중국 한나라 말 나약한 황제의 눈귀를 가리고 전횡을 일삼아 한나라 멸망을 초래한 10명의 환관들을 일컫는 십상시로 비유하며 박 대통령의 위세를 배경으로 국정을 농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치욕적으로 들려서인지 박 대통령은 이를 극력 부인하지만 전횡의 말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8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은 대통령에게 한번도 대면보고를 못했다고 언론에 항변한다. 대면보고라도 할라치면 부속실 비서관의 ‘보고 서류만 놓고 가라’는 차가운 시선만 있었다 한다.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부처 산하기관 무리한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을 설득했는데도 부속실 비서관 한사람의 전화로 도루묵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이들 비서관들의 인사전횡이 많으니 언론에 후속취재를 해보라고 재촉까지 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 방식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내각의 장관들은 존재감이 없고 눈치만 보려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들과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나 있었는지, 의도는 아니었으나 의전에만 치중해 부속실 3인방 비서관들에게 수석들과 장관들에게 대통령을 대리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한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한다. 지금의 청와대 십상시 국정전횡 논거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난 2년이 실패라면 천하의 인재도 구해서 사람도 바꾸고 새롭게 가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바꾸고 국정운영 방향도 리뷰해야 한다. 청와대 인적쇄신 주장이 거세니 문제의 3인방은 돌려막고 몇 사람만 바꾸어 교체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시늉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필연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실패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는 책임기간이 잃어버린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이는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면적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쇄신으로 반전을 꾀할지 아니면 여전히 아집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3인방에 얽혀 실패의 길로 갈지 말이다. **정**



# 구청장·구의원, 이제는 내가 뽑을 수 없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는 주민 자치권 박탈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 종합계획에서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②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③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④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⑤ 자치경찰제도 도입, ⑥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⑦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⑧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8개의 핵심과제와 10개의 일반과제, 2개의 미래발전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계획으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선거가 아닌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풀뿌리 자치의 터전인 모든 자치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계획을 내놓아 많은 갈등을 빚었고, 경실련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또 다시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을 내놓은 것이다.

광역시와 특별시의 자치구는 대도시의 다양성을 통해 아래로부터 혁신을 가져오고, 도시의 창조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폐지하고 하부기관화 하는 것은 도시의 생명력을 박탈하여 관료적 획일주의로 대체하려는 반분권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 자치구 폐지 추진 논거도 타당성 부족

먼저 위원회의 자치구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면 ‘자치구 간 대주민

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권 괴리, 대도시 종합행정 저해와 대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첫째, 자치구 간 대주민 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은 행정구로 전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상실되어 자구적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구로 전환된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에 비해 더욱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제주도에서 다시 기초자치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생활권과 행정권 괴리 역시 행정구로 전환한다고 해서 경제조정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문제는 행정구 전환보다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대도시 종합행정과 자치구의 자율성·다양성의 문제는 중앙-시·도-자치구 간의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자치구역 광역화와 자치구 폐지를 비롯한 자치계층의 단층화가 행정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구의회 폐지는 지역주민 참여 제한

무엇보다 기초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이다. 이러한 기초의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완책으로 시의원 증대 등을 통해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엄연히 그 규모와 대상, 다루는 사안의 범위 등이 다른 곳이다. 기초의회 대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광역의회의 역할 역시 국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에까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제기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획일적 관료주의에 복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어디로 가는가?' 지방자치발전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구 폐지 보완책으로 주민자치회 강화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실련이 지난 12월 22일 주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안성호 교수(대전대 행정학과)는 '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초의회의 정상화는 의회의 폐지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 분권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이미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구조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

적되어 왔던 만큼,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주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주민 자치권 박탈

또한 현재 민선으로 선출되고 있는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들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또한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측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기초단체를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자치권이 없는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결정권이 없고 시장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하급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앙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구청장이 구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면 된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문제가 있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심판하면 될 일이다.

### 중요한 사안 결정 과정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아

무엇보다 구의회 등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당연히 충분한 논의 과정과 해당 지역민의 합의와 자치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 결정 과정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10회의 분위원회, 36회의 분과위원회, 44회의 소위원회, 3회의 실무위원회, 6회의 자문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14.11.24)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떠한 회의 내용과 결과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인 만큼 당연히 위원회의 모든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은 국민들에게 낱알이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정말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면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대도시의 자치구제를 폐지하게 되면, 총 인구의 45%가 기초정부가 없는 대도시 단층 광역정부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효율성 또한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이상은 '근접성의 민주주의'에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참여는 어려워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강제로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반민주적 행위이며 반자치적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 행정 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소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는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그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경**



# 경제특구 외국영리병원 추진의 허와 실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nari@ccej.or.kr

정부는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유치사례가 전무한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외국 의사 10% 이상 고용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하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현재 외국인 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외국환자 유치위해 영리병원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일리 있나?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환자 진료관련 절차와 기준 검토를 통해 장애 사항이 있는지와 외국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현황 및 외국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실적을 추정해 외국환자 진료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 공급이 부족한지 실태를 파악했다.

## 외국인 진료위한 의료기관 공급은 충분하다.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기준으로 2013년말 환자유치실적을 분석하면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진료 기준 시 의료기관 당 하루 평균 0.3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등록의료기관의 추가 환자유치여력은 충분하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전체 의료기관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공급은 충분하다.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 명을 달성해도 연간 180명까지 진료 가능해 현행 공급기관만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27조의2)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를 통한 영리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체계라 하더라도 외국인환자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

〈표1〉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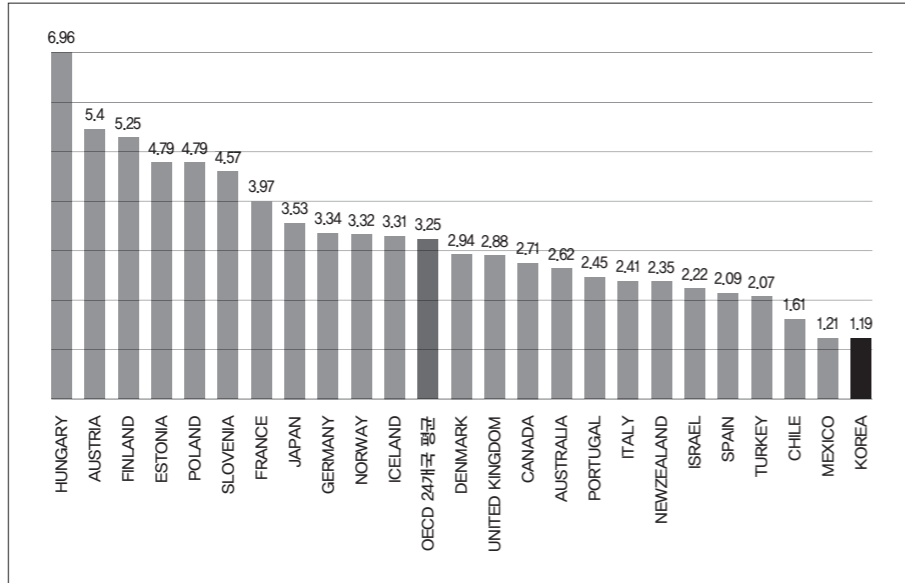
구분	외국인 환자 수(명)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개소)	등록기관 당 연간 외국인 환자수 (일 환산)
한의원	4,592	240	19 (0.1)
한방병원	4,799	43	112 (0.4)
치과의원	2,543	470	5 (0.02)
치과병원	3,513	85	41 (0.2)
종합병원	52,996	162	327 (1.3)
의원	46,366	1,348	34 (0.1)
상급종합	77,738	43	1,808 (7)
병원	18,638	363	51 (0.2)
기타	33	18	2 (0.01)
합계	211,218	2,772 <sup>1)</sup>	76 (0.3)

주) 2014. 9. 16. 조사 시점 등록 기관 수 현황. 2014. 11. 5 현재 등록기관 수는 2,584개인데,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 취소되어 기관수 감소함.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공공병원 병상 보유 비율은 평균 77%로 높게 나타났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OECD 18개 국가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이고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평균 77%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이다.

한국은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에 속했다. 의료에서 영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병원에서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의료 체계는 상당히 취약하다.

〈표2〉 1,000명 당 공공병상수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이 신설되어도 환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 결국 국내환자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병원경영 및 존립의 문제를 들어 영리병원에서도 건강보험 환자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리병원의 내국인 보험환자 진료 허용과 함께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 결국 전국적인 영리병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영리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총 병상 공급은 OECD 31개국 중 2위지만 공공 병상 수는 OECD 24개국 중 최하위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말해주는 성적표다. 공공병원 병상률이 평균 77%로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일부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검토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표3〉 영리병원 허용국가 공공병상 보유 비율

국가	민간병원 병상		공공병원 병상	합계
	영리	비영리		
Germany	30%	29%	41%	100%
Italy	28%	4%	68%	100%
Chile	27%	0%	73%	100%
Poland	27%	0%	73%	100%
Mexico	24%	0%	76%	100%
France	24%	14%	62%	100%
Turkey	19%	0%	82%	100%
Spain	18%	13%	69%	100%
Australia	17%	14%	69%	100%
New Zealand	13%	4%	84%	100%
Israel	12%	18%	71%	100%
Austria	12%	18%	70%	100%
Portugal	8%	20%	73%	100%
Estonia	5%	6%	89%	100%
Finland	5%	0%	95%	100%
Denmark	3%	3%	94%	100%
Slovenia	1%	0%	99%	100%
Canada	1%	0%	99%	100%
OECD 18개국 평균	15%	8%	77%	100%
Korea	0%	88%	12%	100%

정부는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질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하여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은 나 몰라라, 건설사 지원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sub@ccej.or.kr



우선 과제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월세전환과 안전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증금이 월 임대료의 180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보증부월세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월세로 공급케 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비율을 100배 내외로 낮추고 월임대료를 상승시켜 외국과 같은 월세시장을 만들면서 기업의 임대수익을 확보해 준다는 것인데 월세의 임대료 부담률이 전세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현실에서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기업들의 수익수단일 뿐이다. 정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은 세후 5%내외로 세전수익률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책과 수익금 회수를 위한 고가 월세가 우려된다. 전세 제도가 투기유기, 부의 편중 등 문제가 있는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고액 월세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장 적은 제도임은 사실이다.

특히나 임대료의 연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

〈표1〉 정부의 기업형 임대 유인을 위한 각종 지원책

■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의 규제 배제 (핵심규제 6개→2개로 축소)		
구분	현재	개선
임대의무기간	○	○
임대료 상승제한(연5%)	○	○
분양전환 의무	○	X
임차인 자격(무주택등)	○	X
초기 임대료	○	X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	X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 택지지원 \_ LAND

- 다양한 부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택지비 절감
- 건설촉진지구 도입 등을 통해 개발절차 단순화(2년→1년으로 단축), 용적률 상향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자금지원 _ FUND	세제지원 _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용자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li> <li>■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기금의 보통주 출자로 사업리스크 분담</li> <li>• 기금 출자 한도액 상향(600억→9천억원)</li> </ul> </li> <li>■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형 임대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li> </ul> </li> <li>■ 임대사업자 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li> <li>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6억 이하로 확대하고, 8년 장기임대 감면폭을 75%로 확대</li> <li>양도세: 준공공임대(85㎡ 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70%로 확대</li> <li>토지소유자에 대한 혜택: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액의 10%를 감면 등</li> </ul>

만 초기 임대료산정 규제를 폐지해 기업들은 자유롭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애초 고 급화 전략을 내세워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월 5%의 상승은 보여주기 위한 헛구호에 불과하다. 결국 브랜드명과 각종 종합서비스 등을 내세워 고가월세 시장으로 형성될 위험성이 충분하며, 이 경우 주변 개인 전세주택 역시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기업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알짜배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수용권까지 부여된다. 건설사들은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8년임대이후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 LH공사가 매각해주는 등 건설사로서는 밀질 것이 없는 노다지 시장이 될 것이다. 결국은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각종 특혜를 통해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

월간경향

2015년 1월 23일

해주겠다는 꼴이다. 자신들의 임기만 넘기고 보자는 부동산 폭탄돌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정책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실련이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정책, 서민 주거안정 가능한가?」토론회 에서도 여지없이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기실,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낮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된 수익성, 즉 사업성에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시장성이 있는 소비자)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 같다”며 “수요는 중하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상층을 타깃으로 맞춘 것은 집단별 임대수요의 특징과 구조(가구규모, 가처분소득, 채무구조, 직업 등)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는 도시의 중장기적 관리를 왜곡시키거나 어렵게 할 수 있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취재를 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던 서울경제신문 박성호 기자도 “5%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지원이 계속 필요할텐데 과연 정부가 이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LH의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임대주택 정책에 어떠한 순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 협회 공동대표 또한 “이번

정책은 20대 총선용 이벤트에 불과하며, 주거의 공공성이 없고 대기업·부동산 업자에 대한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고 혹평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현재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높은 임대계약의 비중이 극히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및 단순 주택만을 공급하는 초기적 산업단계에서 벗어나 주택의 건설과 관리, 주거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을 만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 서도 “단기적 임차시장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처럼 민간 임대시장내에서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8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방법 대신 서비스 사업전환 등 다양한 유지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지난 28일 정부는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대출 상품 출시를 발표하며 또다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들의 임기동안만이라도 주택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나몰라라 한 채 건설사들의 물량확보와 빚을 내 집을 구매토록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사이 급격한 월세전환과 안전한 전세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

# 북한 바지락 조갯살 40년만에 첫 선, 그 이후

홍명근 (사)경실련통일협회 간사  
lolen86@ccej.or.kr

북한산 바지락 조갯살이 수입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부착한 채 시중에 선보이게 됐다. 이는 민족 분단 40여년 동안 완강했던 금기의 벽을 깨는 파격적 현상의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그것은 남북한 경제교류가 실현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1988년 11월 25일, 한겨레)

## 남북한 경제교류 현실로 다가오는가

### 북한 바지락 조갯살 40년 분단벽깨고 첫선

북한산 바지락 조갯살이 수입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부착한 채 시중에 선보이게 됐다. 이는 민족 분단 40여년 동안 완강했던 금기의 벽을 깨는 파격적 현상의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그것은 남북한 경제교류가 실현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이런의 북한상품 수입은 정부가 지난 10월7일 발표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7개항 개방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개방조치가 실현된다면 간접 무역 등을 통한 북한상품의 국내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간접 무역을 포함한 남북한 교역은 한반도 주변상황을 규정하는 동·서 관계, 남북한 당사국의 주체적 의향에 따라 그 실현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한 정치·군사 문제 선결없는 여타 부문에서의 교역은 그 중요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85년 11월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남북 경제회담을 재개할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남북 경제교류 구상은 정치, 사회 등 제반 분야와 함께 남북 분단을 고정시키지 않는 선에서, 동시에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의 ‘경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체제 차이만큼 상이하며,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자력 경쟁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교역 가능성은 북한이 중·소에서 진행중인 개혁·개방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북한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이 아직 개혁·개방을 수행할 국내 정치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소의 개혁·개방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동유럽과 한국의

경제교류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서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과 헝가리가 상주대표부를 교환 개설하기로 합의한 뒤 북한과 헝가리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헝가리 주재 북한대사 김평일씨를 본국으로 소환했으며, 헝가리는 자국 외무장관의 북한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헝가리의 한국 경제교류는 사전에 소련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의 반발은 소련의 개방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고려, 결국 개방정책을 취하고 남북 관계개선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10월31일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미국의 대북한 교역 허용’ 등 4개항의 대북한 관계 완화 조치를 위한 것도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은 악화된 외환

모는 총 20억3천만달러(수출 9억8천5백만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16억7천9백만달러(수출 8억1천3백만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85%, 소련과는 2억달러(수출 6천7백만달러)에 달했다. 지금까지 공산권과의 교역은 대부분 홍콩, 오스트리아를 통한 간접 교역으로 87년 직교역 실적은 2천2백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유고·헝가리 등과 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전체교역량 또는 직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인 중국·대만과 동·서독 경제교류는 남·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다. 중국·대만의 경우 금년도 간접 무역은 25억달러, 직접 무역은 3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최근 보도됐다. 중국 대륙의 무역(북·청)성과 대만간 직접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선은 10월에 달하고, 과거 대만상품의 대륙 수출이 위주였던 직접 무역이 평방만 수출입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중국·대만간 교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만은 중국에 대해 40년간 고수해 온 3월

### 북한, 정치·군사 우선...개방여건 못갖춰 한국·동유럽 교류에 반발...시기 이른듯

사정으로 개방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87년말 현재 북한의 외채는 모두 52억1천만달러(공산권 외채 24억1천만달러)에 달하나 무역적자 누적으로 84년 3월부터 원리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서방 채권국가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방각국 1백40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단은 지난 8월 9억달러 채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해외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북한에 통보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저속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된 북방정책을 통해 87년 대공산권 교역 규

정체(불합측, 불타협)를 수정, ‘평화공존·평화경쟁·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한 새로운 3대(목)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방간 교역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 교역량은 지난 46년 1억7천만마르크였으나 87년 2억여마르크 수준으로 늘어났다. 동독과 교역하는 서독 기업은 7천개가 넘고 동독 기업과 맺은 계약은 4만5천건에 달한다. 동·서독 교역은 지난 51년 베를린협정을 체결한 뒤 본격화되었는데, 이 협정으로 쌍방 분리는 외국과의 교역이 아닌 국내 교역으로 규정되었다. <고승우 기자>

▲ 1988년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북한산 바지락 반입 관련 기사. 헌법상 북한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대신 반입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며 관세 역시 없다.



겨울은 겨울이다. 여전히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경실련 사무실은 아침이면 자판 치는 손가락도 시리다. 이런 날이면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에 바지락이 한 가득 담긴 바지락 칼국수가 생각난다. 그러나 최근 3-4년 간 바지락 시중가가 크게 올랐다. 품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간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24일 전쟁기념관.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조치 이른바 ‘5·24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제재 5년을 앞두고 있다. 5.24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선박의 남한해역 운항불허 ▲남북교역 전면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중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다. 고작 10여 분 남짓한 대통령 담화로 1989년 노태우 정권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20년의 남북경협은 존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북한산 바지락도 이 때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모르는 분이 많겠지만 북한의 깨끗한 갯벌에서 난 자연산 바지락은 국내 소비량의 3분



▲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시된 바지락 5,24조치 이전까지 국내 바지락 소비량 3분1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 1을 넘게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였다.

북한산 농수산물도 국내물품으로 취급해 관세도 붙지 않아 가격도 저렴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북한산 바지락의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북한은 바지락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다시 한국에 역수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덕분에 중국 업체만 앞서서 돈을 벌고 있는셈이다.

‘그깟 바지락 한 그릇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바지락뿐만이 아니다. 건설용 모래·농수산물·가공식품 등 남북경협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한 경협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

**5.24조치는 대북제재가 아닌 사실상의 남한제재 조치**

지난 12월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실련통일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24



▲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한산해진 남북출입사무소와 도라산역 인근.

조치로 인해 경협환경이 악화됐다는 밝힌 답변이 총 93.5%(100개)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피해사항으로 ‘투자비 및 영업손실’ 57.9%(62개)과 ‘부채상환의 어려움’ 24.3%(26개)을 꼽았다.

영업 손실과 부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피해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5·24조치가 경협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실제 5.24조치 1년 만에 남북경협에 참가한 1000여개 중소기업 중 절반이 넘는 530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했고, 5.24조치 5년을 앞둔 현재는 집계조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북한 선박의 남한해역 운항불허 역시 우리 측 피해가 더 컸다. 5.24조치 이전까지 5년간 북측 배는 300척이 제주해협을 지나갔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한 해역인 원산 앞바다와 해주 앞바다를 지나간 우리 상선들은 8,000척에 이른다. 인도적 지원 역시 미찬가지이다.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북한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5.24조치와 별개로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민간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2007년 4,397억원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작년에는 195억 원에 그쳤다.

이런 피해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11월 5·24 조치로 인한 남

경제위기

2015년 1월 23일

한의 직접적인 피해액을 15조8239억원(145억 8566만 달러)으로 북한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남북경협이 중단된 그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대신하고 있다. 5.24조치 1년 만에 북중무역은 5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10년에 비해서도 무려 63%나 증가했으며, 2013년 북 러 교역은 전년대비 37.3% 증가하는 등 5.24조치를 기점으로 북-중, 북-러 교역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5.24조치의 본래취지와 목적인 대북제재는 북-중, 북-러 무역 그리고 북한의 자생력 등으로 그 실효성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남한 측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만들면서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을 더 재제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5.24조치였나?

**올해는 북한산 바지락 칼국수를 먹을 수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88년도 기사를 보면 북한은 정치·군사적 해법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바지락' 수입의 남북경협을 이끌어 냈다. 실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의 동반자적 관계 발전과 상호교류를 강조했다. 중요한건 단순 선언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해 바로 대북교역이 허용되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91년에는 학생용 가방이 반입되면서 최초로 위탁가공교역이 성사되었고 교역규모도 급성장 하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 '통일대박' 발언과 '드레스덴 제안' 등 솔한 선언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는 전혀 진척이 없다. 지난 12월 18일 통일부 등 4개 부서 합동 통일준비 업무보고는 더 가관이다.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핵심현안을 내버려둔 채 여러 대북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며 기존 내용 그대로 재탕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답보상태인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략도 방향도 없다.

지금 남북관계의 핵심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다. 당장 정부차원의 5.24조치 해제가 어렵다면 5.24조치를 우회하여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한 금강산관광을 우선 재개하여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하여 남북대화의 길을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통일준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전제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장미빛 구상'에 빠져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통일준비에 호들갑인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북한산 바지락칼국수를 먹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 하면 답은 "아니다." 일 것 같다. **정**

# 위기에 처한 서해도서 어민생계의 해법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

인천의 앞바다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 대략 155개 섬들이 넓게 펼쳐져있다. 그중에 유인도가 41개, 무인도 11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그 보다 수가 더 많다고 하는 학자도 일부 있다. 그 것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썰물 때만 보이는 바위섬을 섬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인구는 강화군이 67,358명이고 옹진군 20,826명 인천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나 면적으로는 강화군 39.5%, 옹진군 16.5%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어획고는 35,201M/T 금액으로 환산하면 186,874,437,000원이며 갑각류 51.7%, 패류 25.9% 어류 17.6% 연체동물 2.1% 해조류 1.0% 천해양식업 1.2%순으로 나타났다.(2013년)

지난 2014년 11월과 12월의 서해5도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하루 100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어 서해5도서 인근의 우리어장을 초토화시켰다. 어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바다의 쓰레기까지 모두 쓰러갔다고 한다. 어민들의 어구 손실액만 17억 원에 이르고 조업손실액까지 합한다면 9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을 견해이다. 오죽하면 어민들의 구호에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일본 땅 서해5도는 중국 땅?'이라고 한탄하겠는가.

서해도서는 주 수입원이 어업이었다. 연평도의 조기를 비롯해 민어 그리고 대청도의 홍어까지 고급어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산물은 주로 인천 앞바다에서 생산되었다. 지금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신다.

조기는 서해 남부의 칠산 바다(전남 영광군 법성포와 전북 부안군 위도부근)와 연평도부근에서 주로 잡히던 생선이었다. 지금은 영광군의 법성포 굴비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연평도의 조기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던 어민들은 어로한계선의 남하를 제일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해방이후 전국의 어선들이 다 모여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했다. 조기어획량이 1948년 44,490톤 1949년 59,054톤으로 증가하다 6.25 전쟁이 발발 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1955년 16,541톤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경제

2015년 1월 23일





▲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규탄하는 백령·대청·소청 어민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어민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방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25이후 조기어장이 NLL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NLL(Northern Limit Line)근처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기를 많이 잡으니까 북에서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우리어선에 대한 공격과 납치가 자주 일어나니까 어로 저지선을 2회에 걸쳐 남하하여 설정하자 조기의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어민들은 진술하고 있다.

조기의 어획고가 줄어들자 연평도 어민들은 김양식을 시작 했다. 김은 품질이 좋아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어민들에게 좋은 소득원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 하는 김양식이라 어장관리가 미숙해 갯병이 돌아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다음에 잡기 시작한 것이 꽃게이다. 처음에는 섬 주변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쳐서 잡아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 했다.

꽃게는 1969년 일본에 수출을 시작으로 1970년대 일본 수출의 중요한 품목이 되었다. 연평도

꽃게잡이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80년 전후다. 조기가 사라진 연평도에 어민들에게는 꽃게가 좋은 수입원이 되었다. 일부 어민들이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연평도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 했다. 꽃게는 1980년도부터 크게 증가해 1990년에 23,004톤으로 정점을 찍고 2000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연평도에 꽃게가 한참 잘 잡히던 시기에는 꽃게를 잡는 선주의 집에서 기르던 통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흥청망청하던 곳이 서해5도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중국근해에 어족이 고갈되자 중국 어선들이 NLL인근에서 불법조업이 성행하게 되고 중국 어선들의 조업형태가 치어까지 남김없이 잡아가는 저인망조업이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해5도서 어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시작하는 시점과 꽃게의 어획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꽃게의 어획고는 200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4년 2,683톤 2005년 3,714톤으로 1990년에 비해 약 15%정도 밖에 어획고를 올리지 못했다. 그 피해로 인해 어민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파산하여 지금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세월호까지 사고를 당하면서 어민들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세월호사고가 나면서 그나마 조금씩 잡히는 꽃게나 일반 어족들도 소비자에게 수송을 할 수 없어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해 5도서에서 사는 주민들은 섬을 포기하고 섬을 떠나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서해도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서해도서가 무너지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서해도서는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도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도서에 사는 주민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화물의 운송체계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주민들이 섬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경실련과 수자원공사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서해도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송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서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의 중간 유통을 줄이고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만 형성된다면 서해 도서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소비자들도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백령도에서 자연산 놀래미 1kg에 5,000원하는 것이 중간 마진과 수송비용을 합하면 육지에서는 1kg에 35,000원에서 40,000원 한다. 이런 중간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인다면 어민과 육지의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 지난해 3월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서해5도 어민 150명이 참여하는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을 위한 모금을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연안여행객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 섬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섬은 어족이 고갈되고 육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섬의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하다. 특히 서해5도서는 남북이 항상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섬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힘이 들면 섬을 포기하고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섬과 마찬가지로 서해의 도서도 초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그나마 어족이 풍부 할 때는 수산업을 하기위해 젊은이들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라도 섬에서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해5도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국가 안보를 위해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길은 정부의 몫이 되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와 세월호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도서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정부에 촉구한다. **경원**



#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들은 통준위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4년은 남북 모두 대화의지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한 한 해였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 대화의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정작 대화의 성과는 미미했던 한해이기도 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했고 곧이어 1.16 국방위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월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었고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2014년 상반기 남북대화과 이산가족 상봉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북은 키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훈련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했고 남측 역시 북이 선제외한 고위

급 접촉을 수용하면서 북의 관심사항인 정치적 비방중상 중단을 받아들였다. 남북 모두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에 화답한 긍정적 결과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뒤이은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에게 흡수통일과 북한붕괴 시도로 간주되었고 북한의 정치군사 회담 제의는 한국에게 진정성 없는 평화공세로 받아들여졌다. 남북은 각자 자신의 대화 제의에 상대방이 응하기만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송했다. 서로 대화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묘한 상황이 지속됐다.

북한은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통해 재차 정치 군사 의제를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박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환경 민생 문화 인프라 등 작은통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여전히 남북의 접근방식은 평행선을 달렸고 박근혜 정부가 8.11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장기간 교착됐던 남북 관계는 10.4 황병서 일행이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북한의 실제 3인방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 남측의 대북정책 라인업간 면담이 이뤄졌고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합의된 2차 고위급 접촉마저도 실제 3인방의 방남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의 기싸움이 재연되었고 결국은 합의한 시기를 넘기고 무산되고 말았다.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맞아 전격 방남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3인이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자 일어나 손을 흔들고 있다.





북한 실세들의 전격 방문이 교착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됐고 박대통령 역시 통준위 2차 회의에서 5.24 조치 해제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의 대화 불씨는 살아나는 듯했지만 전단문제를 둘러싼 남북의 양보없는 주장을 넘지 못하고 결국 고위급 접촉은 금년을 넘기게 되었다. 2014년은 남북 모두 대화의 의지를 갖고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한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큰 아쉬움을 남긴 한해였다.

남북이 애초에 합의했던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2015년의 남북관계는 지금 멈춰버린 남북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남북이 2015년에 다시금 대화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대화의 불씨를 살려낸다면 남북관계는 모처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북한의 대내외 정세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 진전을 마다할 리 없는 상황이다. 2015년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처지에서 대결과 교착의 남북관계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북한에게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정치적 안정에 더해 대외 경제개방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집권 3년차에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통일대박론이나 통준위 활동의 현실적 의미는 급감하게 될 것이다. 미중관계와 중일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적극적 개입력과 발언권을 상실한 채 여전히 미중일 사이에서 끼여 있는 어려운 형국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에 남북관계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2010년에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되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경험을 반추해보면 2015년은 남북관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5년은 이중적 의미에서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대화의지를 견지하고 상대방의 요구와 관심사항에 성의를 갖고 대화면서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접근을 한다면 2015년은 모처럼 남북관계의 '골든타임'(黃金期)을 맞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무조건 백안시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인도적 문제와 민생 인프라 및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환경생태 협력 등 박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 접근에 대해 북이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요구에 일정정도 전향적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고 여기에서 자신의 요구만을 반복할 게 아니라 상호 관심사와 요구사항에 대해 양보하고 절충하는 윈윈의 지혜를 발휘하면 2015년의 남북관계는 각자의 필요와 이해에 의해 오랜만에 맞게 되는 황금시간대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5년이 안타깝게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쳐버림으로써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適期)을 허비해버리는 해가 될 지도 모른다. 골든타임을 허송해 버리면 슬기롭게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위기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다.

2015년에도 남북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유연한 대응 대신 자신의 입장과 원칙만을 내세워 기싸움과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게 된다.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집권 3년차의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적 동력과 의지가 반감되고 북한 역시 임



기 후반의 박근혜 정부와 진지하고 생산적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크게 줄게 된다.

관계 개선의 최적기를 보내버리고 남북의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북에 대한 인권압박이 지속되고 북미, 북중 관계가 원만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무모하게 4차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2015년은 관계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쫓겨오는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

####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우회전략 검토해야

북한 정세는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이 정착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외관계 확대와 경제적 개혁개방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이같은 전망에 기초한다면 북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강력한 필요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만들고 외부로부터의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고당기기로 보내버린 2014년과 달리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협력의 원년으로 2015년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사려 깊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 정책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의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 의제로 올려놓음으로써 남북대화의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 2014년 내내 박근혜 정부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 즉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북에게 제안했고 김정은은 정치군사적 의제 즉 비방중상 중단과 군사적 충돌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등 통큰 담판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남북의 관심 의제가 다른 탓에 북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했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국방위 대화 제의를 배척했다. 2015년 남

북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의제와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내 대화제의는 되고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묵살해버린다면 2015년도 다시 엇박자만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못을 박아 놓은 5.24 조치에 대한 지혜로운 우회전략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의 시작마저 불가능한 원천적 봉쇄조치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작정 철회하기도 그렇다고 끝까지 고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5.24 조치가 실효성을 유지하는 한 박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이나 8.15 경축사도 사실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 그렇다고 천안함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뜻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걸림돌로 되어 있는 5.24 조치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적 진전을 위해 5.24 조치를 형식적으로는 남겨둔 채 실제에서는 남북간 교역과 교류 및 투자를 승인해줌으로써 사실상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우회전략이 검토해봐야 한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누차에 걸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한다고 천명해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가 쌓여야 하고 이는 사실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이 먼저 행동을 바꾸고 우리에게 신뢰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북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신뢰의 끈'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그래야 신뢰프로세스는 비로서 구동될 수 있다. **경**



▲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는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을 발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 “NGO의 투명성 확립과 활동가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파”

정지영 회원홍보팀 간사  
ji500@ccej.or.kr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행운과 평화가 충만되는 그런 나날들이 많아지길 기원하며 2015년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첫 인터뷰는 지난 해 가입하신 이동석 회원님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동석 회원님은 예전에 구호단체에서 해외 어린이 교육지원, 후원개발 등을 하셨던 경험 덕분인지 NGO에 대한 인식과 꿈이 풍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동석 회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만의 꿈 그리고 경실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A. 생명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의 자산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청양의 해~2015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꼭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A. 일주일에 온전한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그만큼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Q. 올해에는 이런 소식들이 들렸으면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A. 결혼률 증가, 출산율 증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등

**Q. 어떤 경우에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구나’라고 느끼시는지요?**

A. 사실 요즘엔 미담소식보다는 폭행사건이 라던가, 자살, 사기 등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식들이 많았는데, 최근 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가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4년간 모은 22만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하신 사연을 접하면서, 또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댓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 같아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Q. 경실련 회원으로 가입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A. 회원가입 후 달라진 점은....월간지를 받는 것 정도? ^^;; 회원가입 전, 경실련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단체라는 느낌이 강

했는데요. 회원 가입 후에 경실련이 최근 활동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진행된 후원의 밤에 참석한 후, 경실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경실련의 활동으로 인해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2015년 한해동안 경실련이 중점을 두고 활동 했으면 하는 이슈나 의제 등이 있으신가요?**

A. 사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경실련의 올해 아젠다가 무엇인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2015년 경실련에서는 그릇된 것을 바르게 잡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는 이슈는 의료민영화와 청년실업률 완화입니다. 두 이슈 모두 기업의 눈속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민영화의 경우, 모든 환자가 공평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지만 장점만을 부각시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과 청년인턴 등을 통해서 청년실업률을 완화하였다고 하지만, 제한된 기간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부분이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는 경실련에서 두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민영화와 비정규직, 청년인턴 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바로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내가 만약 경실련 활동가라면, 이것만큼은 바꾸기 위해 노력해볼 것 같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A. 제가 만약 경실련 활동가라면, NGO의 투

명성과 활동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NGO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 많은 NGO들이 후원자에게 지원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실제로 횡령이라던가 안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 많은 분들이 NGO에 대해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NGO들의 투명성 확립에 대해 교육하고 나아가 활동가들이 좀 더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임금, 부당한 대우 등을 개선하여 활동가가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닌, 스스로 발전하고 즐겁고 재밌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Q. 회원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A. 항상 말하고 다니는 거지만.. 지난 8년간 NGO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대상자는 만족을 하지만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주는 스텝의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스텝들이 많이 나오고 이는 결국 후원자와 대상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파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초기자본을 모으는 동시에 함께 일할 동료들과도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있고, 경영대학원에서 학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모두의 .. 이상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경**

# “지금이야.... 희망이다”

##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글 | 정지영 회원홍보팀  
jj500@ccej.or.kr  
인터뷰 내용 정리 | 박성하 회원홍보팀 인턴



2015년은 시작됐지만 우리는 아직 과거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한 발 후퇴했고, 빈부 격차로 인한 경제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졌으며,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등으로 계층간 갈등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묻고 있는 요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경실련 고문 등을 지낸 김태룡 상지대 교수가 새롭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경실련 운동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경실련과 동고동락해온 그에게 변화와 희망을 이끌어내는 힘에 대해 들어봤다.

**Q. 경실련 발원티어로 20년이 넘게 활동해왔다. 과거와 현재 시민운동을 비교해본다면?**

A. 20년 전에는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수가 적어 경실련의 활동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현대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경실련같이 애드보커시(Advocacy) 역할을 하는 시민 단체의 수가 많아져 경실련의 기능은 여전하지만 역할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본다.

**Q. 과거에 비해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줄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흐름속에서 경실련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A. 정부의 보조금 없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시민단체의 여건이 척박한 것이 당연한 얘기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시민들이 여유를 갖고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건이 났으나 현재는 경제가 정체기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요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Ideology)로 인한 것이다. 즉,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어선 부정적인 태도가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에 영향을 미쳐 시민단체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않게 된다.

세 번째는 잘못된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개인주의라는 것은 ‘무임승차’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굳이 내가 내지 않아도...’라

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당분간은 시민사회의 저변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경제회복, 건전한 시민의식 등 흐름들이 바뀌어야 개선될 수 있다.

**Q. 최근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연말정산 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다. 이 정부의 지난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A. 그동안 일어난 국민들의 실망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 정직은 국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알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정책을 당당하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담뱃값인상, 연말정산 환급 정책 등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복지와 같은 정책은 과감한 소세정책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새로운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형성을 국정철학으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하위개념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는데, 앞으로 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갖고 가야할 중요한 국정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A. 우선 초기 박근혜 정부에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공동체를 제안한 이유는 이 정부가 국민들의 통합, 지역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강조했





▲ 지난 1월 진행된 경실련 상근자 교육에서 김태룡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율적 결정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부와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나머지 후반기(집권 3년차)서부터는 맹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을 강조한 정치 철학에만 기초를 두지 않아야 한다. 공동체의 이익만을 강조하다보면 국민 통합은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체 이익을 위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야 하는데 이는 개개인들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개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스스로 다가가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자유주의·공화주의적 공동체 개념을 반영했으면 한다.

**Q. 지난 상근자 교육 때 '정책 결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지난 60년대부터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행정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궁극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다. 그 결정은 행정부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민들의 행정적 참여는 전무하거나 제한적인게 현실이다.

현재 관료에게 정책결정 권한을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정책을 같이 만드는 소위, 공동생산(co-production)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정책 결정 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만

들거나 입안할 때에는 초기단계부터 국민들이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예산에 대한 액수를 합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배심원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정책' 결정의 경우 방대한 예산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찬성할 경우에만 만들고, 반대라면 만들지 말아야 했어야 한다.

이처럼 정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정도는 국민들이 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헌법상 정책 결정 권한 100%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 배심원들이 그 기초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자의적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동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초기에는 대표성을 갖는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그 역할을 하고, 향후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Q. 오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의 첫 출발이다. 앞으로의 포부는?**

A.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가 고유한 기능 및 권능에 비해 그동안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따라서 우선 상임집행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 상집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상근자들의 역할을 도와주고 덜어주는 등 시너

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맡고 있는 경실련 아카데미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아카데미의 기능이 내부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향후 시민교육까지 범위를 더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군데 군데 금이 가고 있는 경실련 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현재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5포(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집 포기)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 층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이 희망이며, 그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다. 과거 6.25 전쟁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느 때가 행복한지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어떤 상황이든지 전쟁보다 더 불행한 경우가 있을까..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지금이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일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현재가 전쟁을 겪었던 과거보다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릴레이 인터뷰

# “시민운동... 재미 있으니 하는 거죠.”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심재석 회원홍보팀 간사  
stratus0217@ccej.or.kr



2015년을 맞이해 월간 경실련에도 새롭게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고민 끝에 2013년에 진행된 바 있던 '상근활동가 릴레이 인터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실련에는 새롭게 식구가 된 분들이 많아 릴레이인터뷰 시작했던 2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경실련의 분위기와 상근

자들을 회원님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경실련 상근자들끼리도 진지하게(?) 혹은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누구를 첫 타자로 모실까... 고민 끝에 지난 2012년에 '간사'로서 릴레이 인터뷰를 했던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부장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년간 바뀐 점,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 등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간사 시절에 릴레이 인터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나요?

A. 일단 결혼을 했구요. (웃음) '너무 사생활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인생의 큰 부분이 바뀐 것이라서... 예전에는 나 혼자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되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운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2년이 지나는 사이에 부동산 운동을 가장 열심히 이끌어가던 팀장님이 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때보다야 지식이 늘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경실련 운동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전에야 간사였으니까 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같이 하면 됐지만 지금은 팀장님과 함께 같이 결정해야하는 입장이 될 때가 많아요.

Q. 부동산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혹은 한 분야를 오래해서 지루하거나 힘들진 않으신지?

A. 아직 더 하고싶구요. 저는 처음 경실련에 들어왔을 때 경실련이 부동산 분야를 잘하는 단체인건 알았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보니 부동산팀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그동안 경실련이 잘 해왔던 분야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선배들이나 전문가들도 많구요.

다른 팀도 그렇겠지만 부동산팀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해요.

Q. 지난 5년 동안 경실련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A. 음... 결과가 좋았던 건 워낙 초반에 했던 거라서.. 4대강 같은 경우는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 되고 있고... 물론 고생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했다고 말하기에는... 팀이 다 같이 했었고 저는 실무만 했었던 거라서요. 뭐 어쨌든 제일 반향이 컸던 건 4대강인데요. 근데 4대강을 한지가 3년 4년이 다 되는데 4년 동안 한 것 중에 그걸 말하기가 참 그렇죠?(웃음) 결과적으로는 4대강이 제일 컸고, 보금자리 주택 분석한 것이 사회적으로 반향이 그렇게 크진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운동이에요. 입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생애 최초여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넘게 자기 집이 없다가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상담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죠. 그 분들이 주변분들에게 알려주고, 작지만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을 보람으로 느꼈죠.

Q.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게 최근에 발표한 '신혼부부 전셋값 마련에 29년 걸린다' 등입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또는 자료는 어떻게 나온건지요?

A. 사람들이 집값이 높다는 건 아는데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네가 생각하기에만 높은거다' '너희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거



다'라는 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했죠. 자료와 언론보도 기사 등을 찾아서 정보를 수집했고요. 해외랑 비교하려면 OECD나 UN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거든요. 오히려 자료가 없어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Q. 경실련에서 5년차이네요.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2세를 갖는 거구요. 딸로요. 올 6월이면 5년을 딱 채우게 되는데 이 때가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5년 동안, 뭘 잘했고 뭘 잘 못했는지...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 위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Q.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주말에 하는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A.** 술 먹고 일찍 가야하는 것 빼곤, 다 똑같죠. 취미는 딱히 없지만 프로축구를 좋아해요. 프로축구 시즌에는 연간권 끊어서 프로축구 관람해요. 사는 곳이 수원이라서 삼성 팬이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웃음) 평소에는 와이프랑 영화 보러 자주가요.

**Q. 그렇다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죽을 때 눈감으면서 내가 후회할 삶은 안 살았다는 걸 느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희생정신이 저

희들 하는 일이 대단하고, 사명감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전 희생정신 없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경실련에서 시민운동 하는게 재밌어서 하는거예요. 그 재미가 단순하게 웃기고 그런게 아니라, 일하면서 오는 재미있잖아요. 이제는 사명감만으로 살기에는 시대가 변했어요. 새로운 활동가들에게도 사명감을 강요하기 보다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Q. 월간경실련을 보고 있을 경실련 회원님들과 시민들께 한마디를 하신다면?**

**A.** 사회를 바꾸는 것도 좋은 거지만 경실련이라는 단체에 후원을 해주시는 회원들에게 적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드려야겠죠. 경실련 회원들이 자랑스럽게 경실련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섭 부장은 참 반듯한 이미지다. 평소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매일 도시락을 싸오는 성실함을 보면서 인터뷰에서도 곧은 이야기만 들려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솔직하고 과감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재미있어서 운동을 한다'라는 최승섭 부장. 그래서인지 이분이 이끌어갈 2015년 경실련의 부동산 운동에 앞으로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경**

# 경실련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 2015 전국 상근활동가 아카데미

이학린 경제정책팀 간사  
posszet@ccej.or.kr



▲ 지난 1월 18일부터 2박 3일간 경실련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전국경실련 상근활동가 교육이 진행됐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 전국과 지역의 경실련 상근활동가들이 1월 8일부터 3일간 청주 충청대학교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국 경실련 상근활동가 교육은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실련 아카데미를 통해 상근활동가들이 시민·사회운동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실련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아카데미가 설치가 논의된 무렵에는 경실련 산하의 상근활동가 교육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많은 상근활동가들이 경실련 아카데미 조직이 신설되는 것에 공감하고 지역과 중앙의 통합성을 높이는 것에 한 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임현진 공동대표의 격려사가 상근활동가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 정미화 전 상집위원장의 강의가 충청대학교 도서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Q. 이번 교육은 어떤 강의로 이루어졌나?**

A. 특강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강의들은 모두 경실련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공석기 교수의 ‘뒤틀린 세계화, 세계 시민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안 찾기’에서는 세계 NGO의 현황과 한국 시민사회 지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박병옥 전 사무총장의 ‘경실련 운동의 철학과 조직 운영원리’ 강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구성해 경실련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지난 2000년 낙천·낙선 운동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미쳤던 영향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양날의 검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경실련 운동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원칙을 중시하고 비 당파성을 견지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앞으로의 시민운동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아로 새겼습니다.

**Q. 이번 교육은 상근활동가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

A. 둘째 날 오후부터 진행된 고계현 사무총장의 ‘경실련·시민운동의 의제 발굴 기획 실행’과 정미화 전 상집위원장의 ‘한국 시민사회운동내의 경실련 책임 역할 자존감’은 젊은 활동가들에게 앞으로 시민운동의 전망과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희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미화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말이 필요한 곳은 분명히 있으며 그때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언제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상근활동가로 지내는 것이 희생일 수도 있으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크나큰 통찰과 시야를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상근활동가에게 깊은 인상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인 김태룡 상집위원장은 “경실련 운동 25년의 의제와 전략 분석”이라는 강의를 통해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기존의 종속적 위치인 참여 민주주의에서 대등한 위치인



▲ 전국 경실련 상근자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경실련 화이팅’을 외치며 경실련의 도약을 기원했다.

계약 민주주의로 이행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 정치 참여 매커니즘의 실패를 들며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부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정책배심원제도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박완기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 운동 지역경실련 운동의 현황과 전망”의 강의를 통해 지역 경실련이 겪고 있는 난항과 고민을 들며 중앙경실련과의 조직적 연계와 지원이 필요함을 설파했습니다.

**경실련의 고민 그리고 고민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상근활동가들**

이번 교육은 경실련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진단해 미래를 예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향후 조직 전체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활동가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일견 이러한 과제가 젊은 상근활동가들이 젊어지기에는 고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상근활동가들 자신부터 책임감 있게 활동하며 우리사회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





# 제주는 지금....

좌광일  
제주경실련 국장

현재 제주도는 중산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산간은 통상 표고 200m에서 600m 사이 지역을 의미한다. 중산간에는 지하수 함량이 풍부한 원시림인 '곶자왈'이 분포해 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뿐만 아니라 경관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중산간 지역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보전가치는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산간이 수년 전 국내 자본들의 골프장 개발로 수난을 겪은 데 이어 최근 들어 중국 자본의 집중매입 대상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투자를 급격히 늘린 중국자본들이 중산간 지역을 매입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중산간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곶자왈 부지가 포함된 초대형 규모의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애월읍 상가리관광지, 차이나비욘드 힐 관광단지, 안덕면 라온프라이빗 II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개발로 중산간이 신음하면서 제주도민의 숨골이 더이상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도민사회에 커지고 있다. 중산간 보호를

천명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과 거대 자본의 공습 이면에는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따리를 틀고 있다.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2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콘도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 제주도가 중국인에 넘어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해안지역은 물론 도심지와 중산간 가릴 것 없이 분양형 콘도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잠식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고, '제주도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자본의 제주 잠식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백통그룹의 위미리조트개발을 비롯해 녹지그룹의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중국성개발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신해원 유한회사의 송악산 리조트개발사업, 분마그룹의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제주에 중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된 것

은 투자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투자유치에만 급급한 결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허물어지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외국인 신규 카지노 허가를 위한 부실한 카지노 조례안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도 올해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8개소로 전국 16개소의 외국인 카지노 중 절반이 제주에 몰려 있다.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의 2013년 연간 매출액은 100억~500억원에 그치는 등 영세한 실정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상당 규모의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제주지역 카지노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을 보면 경영권 분쟁, 사기도박, 매출조작, 외환관리법 위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주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카지노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야말로 부실 투성이에 불과하다.

자칫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중국자본 투자에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전 의도가 있

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정이 당초 제시했던 싱가포르의 '카지노 규제청'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에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이자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카지노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기능을 보면 단순한 심의·의결기구로서 특별한 권한도, 책임도 없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감독위원회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당초 입법예고 조례안에는 감독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카지노업 허가, 조건부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지위승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정작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이러한 핵심 기능은 빠진 채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이러한 각종 불법과 탈세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도 없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세를 징수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마저 마련되지 않다. 현재 이 조례안은 도민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상태이긴 하지만 제주도정이 신규 카지노 빚장을 풀 경우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 카지노 시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자본 사업장이 6~7개 정도인 것으로 볼 때 붓물 터지듯 카지노가 새로 생겨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



다. 카지노 조례안과 신규 카지노 허용의 문제는 도지사나 도의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

**중국 자본에 밀려 내쫓기는 제주 영세 자영업자들**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인 만큼 관광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2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320만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무려 280만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57만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8만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3년에는 181만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8%나 증가했다.

중국자본의 제주 공습도 거셌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유명 명소는 물론 상권 곳곳이 중국인들로 채워졌다. 업체들은 관광객을 잡기위해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기에 바빴다. 관광객 증가는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하상가와 바오젠거리 등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면세점과 카지노, 여행사, 숙박업은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화려한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제주시내 유명 호텔과 식당은 중국인에 넘어갔고 중국자본 여행사가 모객시장을 장악했다. 일부 상권은 임대료가 크게 올라 영세한 자영업자는 길이 내쫓기는 처지에 놓였다.

땅 값도 들썩였다. 2009년 1만9702㎡이던 중국인 토지구모는 2014년 6월말 현재 592만2327㎡로 300배 가량 증가했다. 1%에 머물던 외국인 중 중국인 토지비율도 43%로 치솟았다. 중국인들이 토지매입이 늘면서 일부지역은 비정상적인 가격대가 형성됐다. 토지주는 반색이지만 정작 땅을 필요해 매입하려던 일반 도민들은 급증한 토지가격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로 토지매매가 활발해졌지만 땅값이 2~3배 뛰면서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들은 외지인 등의 수요 급증으로 연일 상승가를 경신하고 있다. 또한 이런 부동산 열풍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의 후유증을 도민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자본까지 끌어들었다. 제주는 외국인이 휴양콘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했다. 제도 도입이후 2014년 12월말 현재까지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인 1007명이다. 이중 99%인 992명이 중국인이다. 올해는 최초로 부동산이민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탄생한다. 제도를 앞세워 중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휴양형 콘도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섰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기는 제주의 허리인 중산간을 위협했고 자연경관을 해쳤다. 최근에는 중국인을 겨냥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진되고 있다. 놀이와 문화시설 등 부대시설을 내세우지만 실상

은 카지노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숙박시설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 자본에 밀려 내쫓기는 제주의 영세 자영업 관광업 호황이나 일부 대기업만 이익보고 있어**

연간 관광객이 12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정작 도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의 떡인 셈이다. 관광시장 호황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호텔과 쇼핑시설,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 자본과 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대기업이다. 자본의 역외유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도민들은 건전한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른바 '낙수효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기대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올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4.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4.0%였던 올해 수준을 상회하는 4.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관련 서비스업이 더 견고해지고, 건설업의 상승세, 농수산업의 부진이 다소 회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했다.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저성장 기조에 따른 내수부진 영향은 다소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전망치일 뿐 도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광

산업 호황세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한 물가 상승은 서민경제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개발사업 수익은 고스란히 거대 자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불균형적인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민 공감대와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해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제주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분양형 리조트단지 남발을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의 신중한 접근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반드시 선행해야 하며, △사회·행정의 낡고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개혁해야 하며, △재정운용 등 비효율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하며,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제주농축수산물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정교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과 평생교육에 투자해야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도민 공감대와 사회통합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정리**

지역이야기

2015년 1월 23일



# 네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었어도 난...

슈퍼처방전(Super Condriaque)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로망은 항상 세척제로 손을 씻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캐릭터이다. 그에게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질병이고 걱정한다.

처음엔 그의 강박증이 꽤나 즐겁다. 비쥬(유럽식 인사)를 하기 싫어 새해맞이 파티를 싫어하고 난동을 부린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건강염려증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과 고립은 꽤나 불편하다. 집에는 상비약으로 가득하고 사람 냄새는 없다. 친구라고는 자신의 주치의인 드미트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직장 내 모든 관계는 물론이고 친구인 드미트리의 주변에까지 피해를 입힌다. 실제 드미트리의 아내는 로망을 당신이 우리집 아들이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이 불편함을 이해하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 영화는 잔잔한 웃음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우리에게 소통과 사랑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넌지시 이야기해준다. 영화 초반에 로망의 사회적 단절은 주변인의 단절까지 이야기한다. 틈만 나면 벨소리가 울려대고 집과 사무실로 찾아드는 로망 때문에 드미트리는 가족과 친구관계가 단절된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피해망상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소통이 단일화 되어 터져 나오는 문제이다.

소통은 다양해야 한다.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나눠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건강한 (사회)생활은 물론, 내 주변인까지 건강해지는 것이다. (지금 누군가의 불통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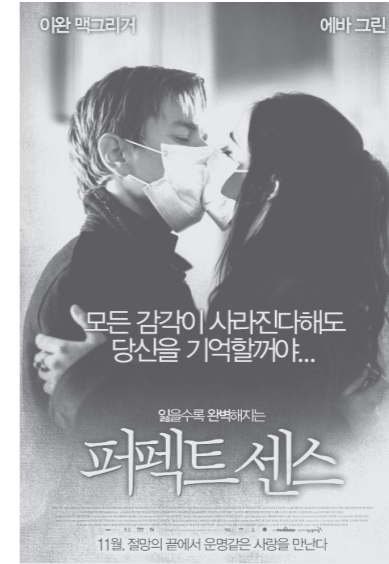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완벽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를 매우 가벼우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건강염려증은 자신보다 더욱 소중한, 거짓말을 하게 만들 정도로 더욱 소중한 사랑을 만나며 치유 되어간다. 이런 즐거운 흐름은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내 베스트 영화 중 하나인 “퍼펙트센스”를 떠오르게 한다.

퍼펙트센스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감각이 하나씩 사라진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 바로 “마음”, “사랑”이다.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고, 청각을 잃어도 다른 감각으로 그들은 살아간다. 하지만 마음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암흑의 순간 그 가장 완벽한 감각을 만나고 깨닫게 된다. 상호간에 오가는 마음, 사랑을...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신종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연구에서는 키스를 하면 10초간 8천만마리의 세균이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굳이 로망이 아니더라도 미간이 찌뿌리게 된다.

하지만 사랑은 그러한 불안과 감정들을 흐리게 해준다. 땀과 눈물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치



사울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만연하더라도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으면 하고, 난 그와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는 모순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모순적인 혹은 이해할 수 없는)용기. 그게 가장 최상위 가치이자 완벽한 감각인 사랑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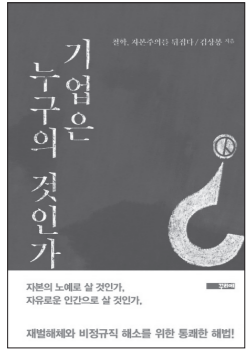
두 영화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본다. “이야기해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담아 만져라”. 우리는 소통을 중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만져야 한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접촉이다. 자신을 모순덩어리로 만드는 사람과 살을 비비는 것처럼 짜릿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최고의 비언어적 표현이다. 그러니 어찌겠는가. 그(녀)를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 만져야지.

물론 겨울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봄이 온다. 하지만 사랑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하고 만지려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계절은 그 겨울에 머무를 것이다. 세균은 걱정할 필요 없다. 키스를 하다보면 세균은 다른 은하계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을 표현하고 만져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가끔 나에겐 사랑이지만 남에겐 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그 불안도 흐리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내서 다가가라. 그건 사랑이다. **정**

필름  
스크린  
경관

2015년 1월 2일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겐 경영권을!’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

윤은주 부동산 · 국책사업 감시팀 간사 dongi78@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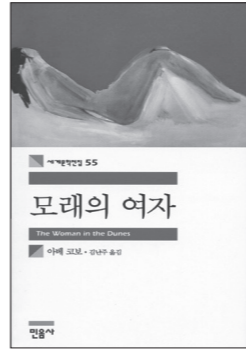
이 책은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되는가”라는 어찌 보면 바보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듯이, 학교 구성원들이 국립대학 총장을 뽑듯이, 노동자들이 사장을 뽑으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네 식당이나 개인 기업은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사장을 뽑을 수 없지만, 주식회사는 원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망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하는 아리송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나갔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든 노동자가 공장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라며, 인간의 자유는 소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노동자를 해방시키고, 기업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권을 분리시켜서 노동자들에게 경영권을 준다면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주에겐 배당금을 주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자는 것이다.

한국의 법률은 마치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주주인 것처럼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인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주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저자는 노동자들만이 주식회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노동자 경영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시한다. 현행 상법에 두 가지 법률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종업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이 두 개의 법 조항을 넣음으로써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을 회사의 노예에서 회사의 주권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루이 14세는 ‘집이 국가’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삼성이 이견회의 것이라 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듯이 그 시대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왕이 국가의 주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생각의 힘은 무서운 것이어서 철학자들이 왜 국가가 왕의 것인가 묻기 시작했을 때 왕의 절대적 지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까이 경실련의 25년 역사만을 돌아보아도 세상에는 한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능하게 된 일이 많이 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과감하게 ‘금지된 것을 욕망하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바보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까? 잘 질문하고, 제대로 답을 찾아가는 2015년이 돼야겠다. **경**



**‘지금 여기’만 아니라면 행복할거라 믿는 당신에게  
〈모래의 여자〉 아베 코보, 민음사**

이우연 사회정책팀 인턴

‘모래의 불모성은 흔히 말하듯 건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흐름으로 인해 어떤 생물도 일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에 있는 것 같았다. 일 년 내내 매달려 있기만을 강요하는 현실의 답답함에 비하면 이 얼마나 신선한가.’ (20쪽)

이렇듯 모래에서 신선함을 발견한 남자는 며칠 후 모래를 증오하게 된다. 바로 일본의 카프카로 불리는 아베 코보의 소설 〈모래의 여자〉 이야기다. 주인공 남자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교사다. 그 답답한 삶 속에서, 그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곤충을 채집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존재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그는 곤충 채집을 위해 해안가의 한 마을로 떠났다가 모래 구덩이의 한 집 속에 갇혀버린다. 그 때부터 그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흘러 내리는 모래를 파내게 된다. 도대체 이 무의미한 노동을 그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읽는 내내 건조한 모래알갱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연신 침을 삼켰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안개의 묘사로 내 눈 앞을 뿌옇게 만들었던 이후로, 감각을 일깨우는 글 솜씨는 간단이다. 쉽게 읽히는 문체에 비해 소설이 던지는 질문들은 묵직하다. ‘공동체와 개인’, ‘인간의 노동’부터 가장 대표적인 주제로 일컬어지는 ‘실존주의’ 등 논할 거리는 많다. 그러나 나에게 이 소설은 은밀한 귓속말을 건넨다. ‘관념’과 ‘체험’ 사이의 아마뜩한 거리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것처럼 모래를 막연하게 그려내던 남자는 실제로 모래를 체험하게 된다. 이 때 남자의 모래에 대한 인식은 혼란스러워진다. 어느 때에는 무력하다가도,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끝내 경이롭기까지 하다.

결론적으로 그에게 모래 밖에서의 삶이 특별할 것 없기에 지옥이었다면, 모래 안에서의 삶은 이유가 없기에 역시 지옥이다. 나 역시 남자의 당황스러움이 낯설지 않다. 멀리서 볼 땐 추상적으로 기능해 봤던 것들이 내 세계가 되는 순간 모래알갱이처럼 시야를 교란시키고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든다. 고등학교 생활 내내 그려왔던 대학교 생활이 그랬고, 앞으로의 생활 역시 그럴 것이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딘가’가 행복할 것이라는 인간의 우둔한 상상을 말없는 모래가 비웃는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라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는 결말에야 알 수 있을 텐데, 이 지면을 통해 그걸 관념적으로 얻으려고 했다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말을 흘러들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궁금하다면 직접 이 소설을 읽어봄으로써 체험해보는 수 밖에. 우선 부딪혀보라. 그래야 모래의 질감이든 실존이든 느껴볼 것 아닌가. **경**



# 회원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안산경실련 회원모임, '행복한 책임기'

심재석  
회원홍보팀 간사  
stratus0217@ccej.or.kr

2015년 월간경실련의 새 코너, '경실련 주춧돌'은 경실련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경실련의 회원들을 만나는 코너입니다. 각 지역에서 어떻게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지역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회원들의 경실련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여쭙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춧돌의 주인공은 '안산경실련'의 '행복한 책임기'라는 회원모임입니다. 2010년부터 매월 한 번씩 회원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단체의 회원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힘든 요즘, 4년이라는 나름 긴 시간 동안 회원들끼리 꾸준히 만나서 토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직접 안산으로 가서 안산경실련 회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 안산경실련 '참살림 사랑방' 입구 모습



▲ 사전에 책을 읽고 세 명의 회원이 발표를 하는 모습



▲ 김성봉 공동대표(좌측)의 발표 후 회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모습

안산경실련의 사무실을 찾아 4호선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역경실련의 사무실이라고 하면 외진 곳에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이 확 바뀌더군요. 한 쪽에는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읽으실 수 있을 법한 책들이 놓여있고, '참살림 사랑방'이라는 이름답게 아늑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날 찾아간 안산경실련의 '행복한 책임기' 모임은 2010년 8월, 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정한 책을 미리 읽고 매달 한 번씩 모여 토론을 하는 회원 모임인데요. 경제, 복지, 생태,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날 읽고 와야 했던 책인 제프리 베넷의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는 회원 중 한 분께서 '별이나 외계생명 등 우주와 관련된 책도 한 번 같이 읽고 이야기해보자'라고 제안을 해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되자 모임에 참가하시는 회원들께서 하나 둘 오시기 시작했는데요. 이 날은 '특별히' 정정순 회원께서 김밥과 부침개, 삶은 달걀 등 음식들을 한보따리씩 싸오신 덕분에 배부르게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처음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기도 했는데요. 이번 모임에는 총 세 분의 회원들께서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회원님께서 '별과 관련된 거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맡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했다'라고 발표를 맡은 나름의 어려움을 말씀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회원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안산경실련 김성봉 공동대표께서는 '행복한 책임기 모임을 통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도 높이고 안산경실련 회원들의 사회적 인식도 높일 수 있다'라고 회원모임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는데요. 책에 나온 '별'과 '외계인' 뿐만 아니라 당장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소행성 충돌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방법 등 실제로 이날 오고간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지구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현황을 살펴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 등 우리 사회의 시사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년간 모임을 진행한 덕분인지 실제로 사회에 대한 여러 시각을 갖고 토론을 하되 다른 의견 역시 존중하는 안산경실련 회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도 가끔은 먹을거리를 가져와 나누거나, 회원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계획하는 등 책 읽는 것 이상으로 끈끈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사무실을 나와 서로에게 인사하는 순간까지 밝은 미소를 간직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제를 맡을 때 빼고는 그냥 수다 떨려고 오는 거지만,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는 한 회원님의 말씀처럼 '행복한 책임기' 모임이 지식의 공유를 넘어 안산지역 속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경**



## 국내 농업 '내우외환'에 시름 잠겨... 돌파구는?

이은용  
경실련 회원

지난해는 정부가 쌀 관세화를 비롯해 각종 FTA를 한꺼번에 체결한 해였다. 이로 인해 국내 농업환경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쌀 산업은 지난 20년간 논의됐던 쌀 관세화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쌀 관세율 513%만 지불하면 어느 나라의 쌀이든 국내로 들여와 판매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농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개방화의 파고를 견디지 못한 채 빗장을 풀어 주게 됐다.



▲ 지난해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의 FTA협상이 2년 반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쌀 관세화를 비롯해 한·중FTA, 영연방 FTA 등 각종 FTA를 체결하면서 개방화 속도를 한껏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농축산인들은 지난 해가 악몽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연이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준비가



▲ 농민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집회를 열고 100명이 150배씩 1만 5천배의 절을 하며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덜 된 농축산인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FTA 등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은 현장에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고 있다. 개방화의 직격탄을 맞은 농축산업이 거의 회생 불능 상태인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추진한 개방 일변도의 정책으로 한국농업은 정말 존재 위기에 몰려 있다. 가뜰이나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먹거리 70~80%는 수입산으로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가 체결되면서 이제





는 90%이상이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 개방화 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밥상에는 전부 수입산만 올라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 20년 후 우리들에게 과연 식량주권이라는 게 남아 있을지 참으로 두려워진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 1인이 하루에 밥을 먹는 양은 채 두 공기도 안 되는 170g 밖에 안 먹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해는 65kg까지 떨어져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쌀밥을 안 먹는 대신 무엇을 먹고 있을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자주 접하는 식품으로 커피가 뽑혔다.

커피는 단일 음식 중에서 주당 소비빈도가 12.3회로 가장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11.8회), 쌀밥(7회)보다도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왔으며, 공기밥 한 그릇의 가격은 200원에 불과한데, 커피는 4000원에서 심지어 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우리 국민들 삶에서 쌀밥의 위치를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쌀뿐만 아니라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 등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철과일보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체리나 바나나, 오렌지, 자몽 등은 대형마트에 가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다. 외국산 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축산인들은 정부에도, 국민에게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단지 우리 농축산인들은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힘든 농사일을 견디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닌 절망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를 아우르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개방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고, 농업이 보다 발전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기존의 유통질서를 개선해 농축산인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농축산물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범국민적 캠페인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매진해야 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만큼 친환경 농업 전환 등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마케팅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애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농축업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피폐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현재 IT, 중화학공업 등의 산업부문에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들 대부분이 농업강국이었음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가 똘똘 뭉쳐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 농축업과 농축산인들이 위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



▲ 1인당 쌀소비량이 하락함에 따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정소비량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3월 14일을 '백설기 데이'로 정하고 쌀을 이용한 케이크, 떡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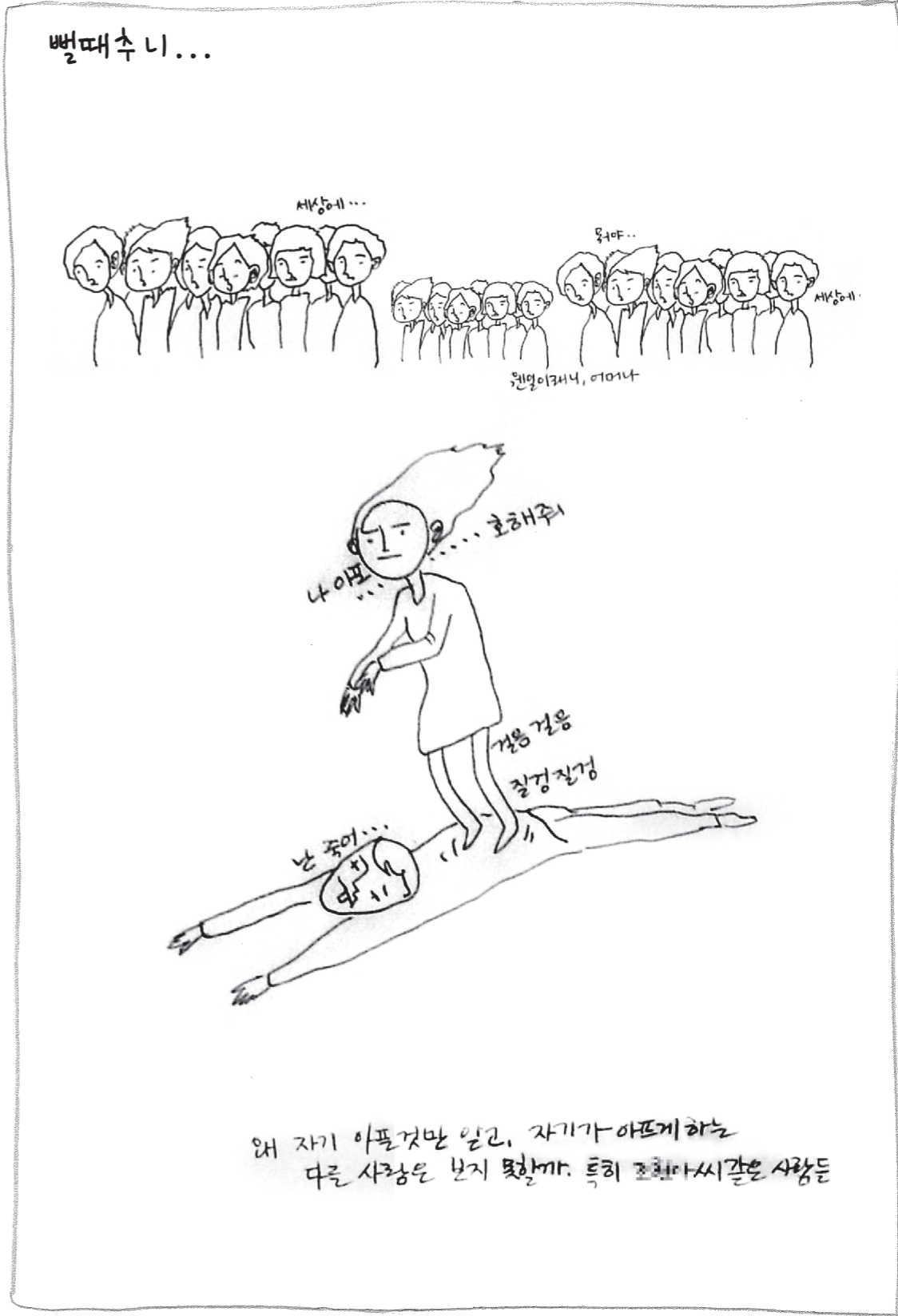
# 초행길을 위한 보다 쉬운 지도가 됐으면.....

박성하  
회원홍보팀  
인턴

‘첫’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중요하다. ‘첫’인상, ‘첫’사랑.....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 하나라도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할 나이인 20대이지만 부끄럽게도 내 머릿속에는 영어점수, 자격증 등 취업에 관련된 스펙들에 대한 개인적인 걱정으로 ‘사회문제’라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벅찬(?) 그 문제들이 들어올 공간은 없었다. 그런 나에게 ‘월간경실련’은 사회문제에 대한 늦은 ‘첫’만남의 장소가 됐다. 기획특집을 통해서도 국정감사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만함과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현실을 보았다. 그것에 대한 날카로운 원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개인적으로 기획특집2에서 가장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내려갔던 것 같다. 부동산 가격 문제가 당장 나에게도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겪게 될 문제라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 대비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 가능 연 수는 35.9년으로 약 36년간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겉으로 보여지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역이야기1,2를 통해서도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나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별 관심 없던 다른 지역의 사회문제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문화산책이나 동승동 책방골목 섹션에서는 단순히 영화나 도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 사회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소개하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다만, 다소 아쉬웠던 점은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낯선 그에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 호에 경실련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설립취지 등이 간략하게나마 소개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처럼 사회문제에 대해 ‘첫’접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마다 그와 관련된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간단한 풀이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처음 사회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한 나에게도 ‘월간경실련’은 사회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정리가 잘된 그런 길이며 장소였다. 초행자인 나에게도 친절히 지금 이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길. 하지만 앞으로의 월간경실련은 ‘첫’걸음을 떼는 이들에게 보다 더 쉬운 그런 길이며 장소였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워질 월간경실련을 기대하며... **경**





## ■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을 읽고

(01.15) @iloveRHCPyu <트위터>

외국인환자는 오지도 않을 텐데 의료영리화의 포구를 열기 위해 수작 부리는구나.

▶ 영리병원 유치사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과욕이 부른 참사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한 채 의료영리화에 올인하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영리병원의 허용은 비록 경제특구에 한정된 것일지라도 전국적인 확대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nam4623n)

## ■ '박 대통령, 근본문제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 성명을 읽고

(01.12) @hae30000 <트위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 알랑가... ㅋ

▶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적쇄신 등 구체적인 국정쇄신방안을 발표하기를 기대했는데 그야말로 헛된 기대가 되어버렸네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문고리권력 3인방도 모두 잘못이 없어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 인적쇄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 민주적 국정운영을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yustina0264)

## ■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읽고

(12.18) /antisamsungeverland <페이스북>

이재용씨는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라!

▶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의 부당이득은 법 제정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해소하는 금산분리를 이행해야겠죠.

권오인 (사)경제정의연구소 팀장 (/100001014117653)

## ■ '김영란법 원안 입법 촉구 법학·정치학·행정학자 169명 공동선언'을 읽고

(11.26) @Shkim4Shkim <트위터>

단팔뚝부터 잠수함, 전투기까지... 군대의 비리는 참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알록달록 다채롭습니다.

▶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김영란법'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누더기 법안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네요. 김영란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경실련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yustina0264)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김용재 | 경실련 하이팅 창립 50주년 위하여, 2015년 월간경실련을 월간 발행의 해로 !!!

김정욱 | 경실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주목 | 경실련이 작금의 민주선진사회로 틀을 잡아가는 대한민국호의 조타수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며, 민주사회의 기동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준호 | 하이팅

김창래 | 나중에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관점 이외에도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희 | 뉴스를 통해 억울해서 가입하고자 합니다.

손승민 | 사회의 현안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공정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제명 |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명진 | 비정규직 근로자 때로는 감시단속적 근무자입니다. 국민소득은 오르는데 우리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조직적으로 꾸준하게 대변해 주는 곳도 없는 것 같고요.

이용복 |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은숙 | 정의실현,공평한사회

지동현 |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지동현이라고 합니다. 어느날 문득 금융실명제위반이나 탈세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일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NGO기관 중 하나로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여 더욱 매력을 느낀 듯 합니다. 얼마 안되는 후원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가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시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 트위터 @cyberngo |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 | 전송 02-741-8564~5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 2015. 01

- 01.05 '검찰의 정운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 01.08~10 2015 전국경실련 상근자교육 진행 ▶사진1
- 01.12 '박 대통령, 근본문제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 성명 발표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성명 발표
- 0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논평 발표
- 01.14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발표



사진1

## 2014. 12

- 12.02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성상철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성명 발표  
'경실련-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2
- 12.04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성명 발표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성명 발표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라' 성명 발표  
'한국 화이자사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 성명 발표
- 12.08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성명 발표
- 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청원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성명 발표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 말살 행위' 성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전월세상한제 국회 기자회견 ▶사진3
- 12.10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 - 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 12.11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성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성명 발표
- 12.12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의원 청부입법은 국민 기만행위' 성명 발표



사진2



사진3

- 12.16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 국토위 제출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험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 12.18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성명 발표  
고양이에게 생선 말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박원순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성명 발표  
G20 시민사회 워크숍 ▶사진4
- 12.19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발표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발표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토론회
- 12.22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사진5  
지방자치발전계획 평가 토론회 '한국의 지방자치, 어디로 가는가?' ▶사진6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실태 조사결과 발표
- 12.23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아합을 중단하라' 성명 발표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성명 발표
- 12.26 '정부여당은 원칙없는 재벌총수 사면·가석방 여론 조성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 12.30 '특검 통한 국정농단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성명 발표
- 12.31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사진4



사진5



사진6

## 2014. 11

- 11.18 농심 라면 GMO 표시실태 결과 발표  
국회 예결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11.19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11.20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발표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토론회
- 11.21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발표
- 11.24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7
- 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세계개편안 의견서' 제출
- 11.26 김영란법 원안 입법 촉구 법학·정치학·행정학자 169명 공동선언 발표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조사 결과 발표
- 11.27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8  
'국회 국토교통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의견서 제출



사진7



사진8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 신입회원 135명, 가입일: 2014년 11월20일~2015년 1월 22일)

(재무부장학회) 광동철	김미아	김시현	김창현	박종희	심인섭	유명진	이미경	이재우	장길호	정자홍	천홍석	최진혁
(주주대표자회) 권경숙	김민석	김영무	김태균	박창희	심재삼	윤서희	이민구	이재임	장원규	정재교	청주KVC	충북교육발전소
(주)한성리인 권계옥	김민수	김용보	김현숙	방성호	심재서	윤은주	이민우	이재중	전동환	정택수	최규덕	한국농업경영학회
강영훈	권영봉	김백규	김용재	두깨친구들	배광호	안병익	윤정섭	윤지원	이상미	이정성	전인자	정택수
강용호	김경자	김보람	김정옥	문상범	성윤경	양영희	윤지원	이상범	이정훈	전진택	정학수	최상희
강주례	김근초	김봉만	김정현	문지원	손선주	엄인용	이경희	이상수	이종필	정규식	제천교통	최선아
강지은	김기호	김상현	김주목	박계원	손승민	오제명	이동영	이숙애	이지영	정미영	조선희	최영애
경인구	김남식	김성민	김준호	박병주	손장원	이동욱	이시우	이진여	정순일	조해성	최인규	
고덕봉	김동원	김성예	김창래	박익중	송민정	오호창	이동욱	이우년	이형택	정의곤	주영훈	최 일
고말임	김말숙	김성일	김창모	박종순	송은희	우정용	이명진	이은실	이호동	정인구	지동현	최재국

본부	강홍천	권동현	김경호	김동호	김상겸	김영미	김유진	김정훈	김진수	김하나	김효원
그리스도학교 교수협의회	경민수	권득용	김경호	김동환	김상균	김영복	김유찬	김제영	김진아	김학수	김희규
한국산업복지회공제조합	계종미	권봉철	김경환	김동훈	김상균	김영선	김유환	김종걸	김진현	김하나	김희영
아름다운한의원	고강석	권상용	김관영	김득기	김상영	김영섭	김윤기	김종근	김진호	김해성	김희철
피터엘럴드스텍	고경일	권상주	김관용	김만수	김상우	김영순	김윤두	김종덕	김찬동	김해숙	니권일
(주)아이티엔티	고말임	권성윤	김광현	김만호	김상현	김영실	김윤식	김종록	김찬석	김형선	니명희
크레딧책임(주)	고영희	권소영	김국주	김민중	김생수	김영은	김윤희	김종묵	김찬호	김현동	니병현
브이앤브이(주)	고은진	권순범	김귀해	김영균	김석환	김영재	김 용	김종민	김창균	김현덕	니판수
군산경찰서	고인수	권순용	김규범	김명기	김선필	김영주	김은영	김종배	김창범	김현석	남기원
김보라미	고정희	권영봉	김규훈	김명묵	김선희	김영주	김익수	김종섭	김창식	김현성	남상권
강경수	고지석	권영준	김근수	김명애	김성수	김영준	김익수	김종숙	김채윤	김현수	남영진
강국신	고진강	권영진	김근철	김명임	김성숙	김영준	김인곤	김종우	김 천	김현욱	남원호
강내원	고행산	권영한	김근초	김명철	김성일	김명철	김인선	김종찬	김천중	김현정	남현주
강덕순	고형석	권윤규	김기숙	김명환	김성중	김영철	김인숙	김종혁	김 철	김현주	남호원
강명구	고홍민	권윤정	김기열	김무준	김성천	김예승	김인영	김종환	김철주	김현주	남호현
강문희	공병욱	권윤학	김나리	김문환	김성태	김완래	김인태	김주목	김철호	김형규	노관숙
강민구	공정표	권일민	김남덕	김미진	김성필	김완배	김일수	김주영	김철홍	김형균	노연경
강상구	공진하	권준기	김남선	김미희	김성훈	김완욱	김재구	김주영	김철환	김형원	노우호
강선미	곽기훈	권준석	김남훈	김민수	김세진	김왕식	김재구	김주중	김충환	김형조	노재훈
강성주	곽남준	권준우	김대균	김병각	김소라	김용남	김재길	김 준	김치수	김형준	노정호
강영식	곽세별	권 찬	김대선	김병구	김수영	김용석	김재섭	김준배	김태균	김형진	노태균
강원호	곽지용	권철민	김대성	김병성	김숙희	김용섭	김재일	김준석	김태균	김혜경	노희철
강은현	곽효석	권태환	김대중	김병수	김순임	김용숙	김재하	김준식	김태동	김혜련	단호섭
강일환	곽희남	권향년	김대현	김병수	김승보	김용식	김재환	김준영	김태수	김혜숙	라운흠
강재혁	구경이	권혁민	김대호	김병수	김시연	김용지	김정돈	김준한	김태수	김혜순	류도암
강주현	구길두	김갑배	김대훈	김병주	김시영	김용찬	김정수	김준호	김태완	김 호	류동훈
강지영	구성찬	김건일	김도준	김병철	김애자	김용철	김정신	김지연	김태빈	김호경	류명현
강지은	구수정	김건호	김도형	김병학	김양규	김용철	김정욱	김지영	김태현	김호균	류시문
강창걸	구지홍	김경모	김도희	김병호	김양수	김용태	김정원	김지현	김태현	김호성	류지성
강창구	구정모	김경배	김동구	김보경	김양진	김용하	김정중	김지혜	김태형	김호식	류충렬
강창균	권경무	김경수	김동규	김보람	김연주	김용호	김정한	김지혜	김태호	김호연	류형욱
강철규	권경숙	김경수	김동규	김복환	김연주	김우비	김정현	김지호	김태환	김홍관	류화근
강철승	권계옥	김경운	김동균	김봉곤	김영건	김원석	김정호	김진구	김태훈	김홍권	마미영
강태경	권구혁	김경준	김동영	김부경	김영경	김원태	김정호	김진만	김태훈	김홍규	맹광영
강혜정	권규향	김경철	김동을	김 삼	김영무	김유룡	김정호	김진명	김평진	김효선	맹성렬

문경식	박성정	박종석	배유아	손봉호	안규창	오일석	윤득구	이금희	이상철	이용한	이지훈
문광기	박성혁	박종선	배인명	손성일	안기정	오정환	윤성균	이기승	이상현	이윤향	이진경
문금희	박성훈	박종소	배장수	손승태	안병노	오해승	윤성희	이기우	이상희	이원식	이진영
문미란	박세원	박종원	배종석	손재운	안병익	우성훈	윤숙자	이기용	이석교	이원재	이진원
문상준	박세훈	박주은	배종숙	손정아	안병준	원 국	윤영곤	이기중	이석규	이원재	이창엽
문석진	박수경	박준수	백요한	손종보	안병화	원대한	윤영천	이기현	이석기	이원희	이창효
문세영	박수행	박준영	백은정	손호중	안상용	원동환	윤윤식	이낙원	이석범	이윤규	이창희
문소상	박순기	박준형	백정숙	손희경	안영호	원영진	윤은선	이남경	이석제	이윤배	이철우
문인섭	박승배	박중철	백진현	손희준	안영훈	원재환	윤은주	이다혜	이석진	이윤상	이춘수
문장협	박승상	박지은	법 등	송기민	안완용	원종호	윤인오	이대영	이선신	이윤행	이태섭
문지원	박승옥	박지혜	변동철	송기성	안용식	원혜영	윤일성	이덕희	이선태	이윤호	이태영
문차호	박승진	박지호	변상해	송미영	안인화	원홍식	윤재용	이동석	이성계	이은기	이태진
문태현	박양제	박지환	변재근	송민정	안정혜	유관준	윤정섭	이동석	이성계	이은재	이필생
문현정	박영규	박진규	변준섭	송병록	안종범	유기석	윤종빈	이동석	이성구	이의영	이학수
문호준	박영규	박진순	사동천	송수영	안종한	유기선	윤종식	이동석	이성규	이익모	이한길
문 희	박영기	박진홍	서경호	송영호	안지현	유기천	윤지성	이동주	이성근	이인영	이한민
민남미	박영남	박창민	서순탁	송용석	안진걸	유기청	윤지원	이동준	이성복	이 일	이한섭
민병욱	박영민	박창임	서승완	송원기	안진호	유기현	윤진철	이동준	이성욱	이일권	이현미
민선욱	박영수	박철수	서영덕	송철주	안철원	유남식	윤한필	이동한	이성재	이재강	이현석
민희숙	박영웅	박치권	서영상	송인섭	안현구	유덕열	윤효상	이동현	이소영	이재걸	이현성
박건영	박영철	박치우	서완석	송인윤	안호정	유동진	은억수	이동호	이소현	이재림	이현숙
박경애	박영환	박태만	서용욱	송태교	안희숙	유동훈	음유정	이동호	이송수	이재욱	이현재
박경준	박용석	박태선	서윤석	송하동	안희철	유명진	이갑수	이만호	이수연	이재완	이형세
박계원	박우룡	박태영	서은경	송호영	양광희	유병상	이강운	이명진	이수영	이재운	이형희
박교영	박우석	박한용	서정일	신규철	양대규	유병서	이경도	이모세	이순기	이재은	이혜진
박기영	박원규	박한호	서종대	신근택	양두석	유성하	이경수	이무송	이순배	이재중	이호경
박기철	박윤희	박행우	서종철	신동식	양부식	유 송	이경숙	이미경	이승대	이재환	이호섭
박기훈	박은아	박현진	서지원	신동조	양비화	유인상	이경우	이미정	이승섭	이재훈	이호욱
박남규	박은준	박형근	석기영	신동진	양승두	유인환	이경태	이민아	이승용	이정남	이화영
박남수	박은현	박형삼	석철수	신두철	양연식	유일용	이경호	이민우	이승우	이정성	이화주
박노건	박응순	박혜란	선동수	신봉기	양원표	유장연	이경훈	이범석	이신호	이정영	이 훈
박노현	박의용	박호걸	선중국	신상진	양윤숙	유재민	이경희	이병재	이예화	이정현	이훈섭
박다진	박이규	박호영	설원식	신승연	양인준	유재욱	이곤섭	이병관	이언석	이정희	이희중
박미나	박익중	박홍순	설창인	신승우	양창우	유재중	이광섭	이병주	이영란	이정희	임건목
박미선	박인구	박후근	성광식	신영철	양혁승	유재혁	이광용	이보실	이영림	이정희	임명호
박민준	박인선	박 훈	성금성	신영철	엄원중	유종성	이광월	이봉숙	이영범	이종건	임 삼
박병섭	박재갑	박희경	성병화	신완기	엄인수	유진호	이광택	이봉훈	이영욱	이종규	임서구
박병오	박재완	박희선	성 신	신용규	엄홍길	유평준	이광필	이삼열	이영을	이종길	임성희
박병욱	박재익	박희진	성원규	신은정	여은희	유해신	이광현	이상룡	이영중	이종수	임용기
박병일	박재천	반철진	성윤숙	신정무	여해경	유항임	이규용	이상범	이영준	이종욱	임용섭
박상대	박정교	방상윤	소경섭	신지영	염규석	유희숙	이규용	이상선	이영채	이종윤	임정원
박상렬	박정민	방정혜	소순창	신철영	오동엽	윤건수	이규철	이상엽	이영현	이종후	임정규
박상성	박정석	방종수	소진성	신현호	오세정	윤경로	이교성	이상엽	이영호	이종훈	임종필
박상혁	박정식	배승철	소현민	심대보	오세호	윤경숙	이근식	이상우	이용만	이주아	임창선
박선희	박정환	배영기	손건일	심순혁	오순택	윤기복	이근태	이상운	이용배	이주하	임창빈
박성배	박제화	배영환	손우길	심충진	오승훈	윤대현	이근행	이상운	이용선	이준영	임태영
박성용	박종근	배용근	손병권	심후연	오원준	윤동열	이근환	이상진	이용승	이지영	임현진



임효정	정관용	정창운	조진오	최성실	한광덕	황신준	박경난	최정우	박준우	최호창	박인동	김진욱	정세환	김수정	박한수	이산학	허철수	문성현	정현걸	김다습	박미정	안명자	이필상
임희윤	정덕임	정태근	조준수	최성주	한동운	황영미	박상위	하상우	배인교	한광수	서경수	김태희	정의호	김순향	박희자	이상귀	허추구	박귀룡	정형호	김동범	박민관	안철환	이하나
임희청	정명채	정태영	조태임	최성현	한상훈	황유경	박영웅		배중근	한정훈	신희권	김형경	정의훈	김승한	반대식	이상미	허희경	박봉찬	조덕수	김미숙	박민영	양금석	이혜수
장경완	정미숙	정대민	조한희	최성훈	한석웅	황이남	박인순	☞경실련동일협회	백인용	황대중	심재원	김황식	정현석	김양근	반창오	이상용	현정임	박임관	조봉래	김범운	박복임	양승오	이혜진
장경태	정미화	정태성	조현철	최수진	한선아	황이숙	박재호	선월 몽산	백학순	황지연	유주상	노영성	조남환	김영춘	방미자	이상천	홍성태	박종희	조영화	김봉화	박신애	양정현	이호동
장동민	정범석	정태완	조형준	최수진	한승구	황인구	박정윤	강만성	변상호	윤상경		류형춘	조우현	김용운	배동주	이양식	황남훈	박찬진	주재훈	김성자	박성배	양철원	이호석
장문호	정병록	정태철	조희근	최승섭	한승호	황인선	박찬우	강은석	서관승	☞경제정의연구소	이대순	박상덕	조영미	김용재	배수중	이장명	황점득	반종국	최병창	김수진	박성화	오명희	이호열
장병호	정병순	정학수	주관수	최신애	한승호	황정우	박희정	고석주	성재상	김길생	이덕우	박운남	진수환	김원용	백세정	이장표	황정원	방현주	최병철	김승복	박승원	오민석	이호성
장보름	정병오	정한근	주상희	최영식	한영관	황철진	배용규	고유환	송응석	송운학	이명근	박인재	최규천	김의아	백순환	이정택	배의용	최삼호	김애란	박영재	우동훈	임재욱	
장삼기	정삼룡	정해석	주용학	최영애	한용석	황호식	백은정	곽일환	신경화	강명철	이석형	박종시	최복규	김장이	백승일	이창섭	☞경주경실련	배철용	최석재	김연옥	박옥남	우병설	장영기
장서림	정석희	정혁제	주찬식	최영철	한용환	황호열	백인길	권수복	신종성	곽수근	이순기	박지호	최상경	김정주	서주중	이창훈	이창현(철우스님)	서경석	최 암	김영근	박은경	원병재	장지은
장석춘	정선철	정혜경	지동익	최원영	한홍열		서인호	김근식	안춘훈	김동우	이지연	반태연	최송길	김정택	손은희	이철용	경주공원묘원	서동부	최임석	김영미	박재금	유수연	전광섭
장승진	정선혜	정예승	지정희	최원천	함동균	☞경실련도시개발센터	신행숙	김동범	위정희	김소연	이 진	배정순	최순희	김정훈	손정식	이형로	이홍웅(성타)	서흥기	최진건	김용길	박재철	유홍우	전종석
장심영	정선화	정혜승	진석수	최유영	함동균	강순주	심영길	김동환	윤영진	김종근	이창수	서은주	최승룡	김종태	손진일	장길호	휴먼뱅크(주)	손영섭	최춘자	김원선	박재희	윤명숙	정도환
장영식	정성봉	정혜진	진영수	최윤재	함두호	강준모	심재민	김민식	이기자	김지환	이태호	송문길	최승준	김종현	송수영	장남수	제갈음미	손영태	최현익	김윤권	박정욱	윤문선	정병오
장영오	정성심	정희성	진유식	최윤진	함형욱	고일두	양우현	김병조	이명자	김 혁	장 영	송민석	최은승	김정집	송오성	장동석	강정덕	손용락	최홍배	김윤옥	박종기	윤승형	정상영
장영환	정세진	정호진	진중난	최은진	허남중	곽 도	오세형	김삼수	이승규	노영록	장진영	송재석	최재현	김종근	송정일	장석주	강지명	신수철	하재훈	김윤재	박종미	윤종미	정애숙
장옥숙	정세훈	정희창	차은상	최은철	허병권	곽충삼	원민철	김성호	이우영	문인철	전종찬	신미영	한동준	김태연	신미경	장은영	곽정섭	안경복	한상준	김윤호	박준서	윤진원	정원이
장원규	정승상	조강희	채두병	최인숙	허 석	구자훈	유영모	김수동	이웅립	박상안	전태석	신성진	홍용표	김민희	신미애	전갑생	권기흠	양철영	한순희	김은진	박진기	윤창일	정인애
장유리	정승준	조건영	채민성	최 일	허수범	권영진	이동근	김용수	이익현	박익범	정경수	신승춘	홍진원	김필성	신 숙	전기풍	김경대	엄권섭	김은찬	박춘선	윤 철	정중환	
장유환	정승화	조경민	채예정	최장원	허원철	권 일	이만희	김용현	이재선	백승호	조영관	심규만	황상철	김한주	신용호	정보건	김경호	오영석	☞광명경실련	김정길	박태준	이강순	정지선
장은미	정연섭	조광현	채원호	최정표	허익배	김경희	이명수	김은수	이점호	백종호	조 현	심윤보	황은남	김한표	신진영	정석윤	김관열	우충철	찾는이광명교회	김종임	박혜정	이기영	정하준
장웅선	정연태	조광희	채중현	최종석	허지영	김광만	이병준	김장철	이정우	성호준	차부연	심재상		김호일	안미나	정영현	김기석	우호식	이종호(상허스님)	김진경	배권식	이말복	정학균
장중철	정영만	조규홍	채준하	최종일	허창환	김금옥	이순배	김재기	이중수	손창민	추승우	심현섭	☞거제경실련	나기석	엄수훈	정중화	김기중	윤병길	강 남	김진숙	변미애	이명숙	정혜경
장철기	정영식	조민상	채홍석	최종철	현승근	김기성	이양재	김재원	이중인	여은미		양창훈	☞기산종합건설(주)	나양주	여정애	정지영	김동명	윤정수	강성철	김현정	변한주	이미선	정혜선
장형환	정왕규	조병익	천기용	최준용	형성훈	김대용	이유미	김정웅	이진만	윤언철	☞강릉경실련	원경숙	강경수	남기원	오성관	제문규	김만곤	이 관	강신재	김현희	서방자	이미희	정희균
장혜령	정용택	조성호	천대용	최종길	홍광선	김덕기	이은재	김정진	이현희	이덕호	☞한살림강릉생협동조합	윤도현	강성배	남덕희	오성주	조병호	김만규	이규찬	강옥영	김혜숙	서순자	이병득	제창록
장희곤	정용화	조성태	천민승	최지민	홍대식	김도영	이재문	김정현	이화용	이승훈	강남일	윤성원	강애리	남원식	오정림	조승재	김상길	이동호	강옥희	김혜정	서용원	이병렬	조경봉
전광호	정운수	조성희	천병우	최지한	홍도천	김동식	이정식	김제천	임명선	이혜란	고석태	윤영호	강윤영	남화정	육근호	조원배	김상택	이미경	강은숙	김효숙	서유리	이병순	조광진
전근수	정원철	조성희	천송걸	최지현	홍미미	김미경	이제선	김중구	임홍승	임효창	고재정	이광중	강정숙	노석현	육두표	조하영	김양선	이상기	강찬호	김희수	서이석	이병철	조범상
전기호	정원희	조순열	최경순	최지훈	홍선표	김석기	이주희	김주호	장인석	정길채	구광범	이귀녀	강정호	노재남	육방호	주채빈	김연옥	이상덕	강희규	남기표	서태원	이복자	조아라
전대홍	정윤희	조연정	최광규	최창배	홍성균	김성수	이창수	김진환	장형원	정홍준	권상동	이규송	강학도	노재천	육용석	지영배	김영화	이상수	강희범	남상경	석학주	이부순	조은하
전명석	정의정	조영록	최광섭	최태영	홍성환	김세용	이현주	김태환	전미옥	천미림	권오석	이숙희	경명자	류금렬	육충석	진성우	김인수	이상우	고완철	남윤화	성윤경	이상봉	조태섭
전병순	정인호	조용기	최광현	최호영	홍순엽	김 영	이희승	김학성	전영선	최재윤	김남두	이요한	고석진	문상필	우병훈	천일봉	김정제	이성락	고재원	노경림	성인숙	이상숙	조홍식
전병식	정일용	조윤정	최근묵	최호용	홍순영	김재령	임경수	김형만	정동욱	표정호	김남영	이윤일	고영주	문철봉	우정숙	최삼주	김종구	이성민	고정민	노병일	손선주	이상진	주명식
전봉양	정재은	조은숙	최기환	최홍식	홍종학	김재익	임창규	노귀남	정영숙	허능식	김동명	이정임	권민호	박광호	원순실	최선종	김철년	이성조	구교형	노신복	송상욱	이송재	주대진
전봉진	정재진	조은혜	최다정	최홍엽	홍준표	김정인	임형백	당명숙	정명자	홍창식	김동현	이제영	권혁중	박대기	원중태	최상수	김철수	이원희	권도형	노용래	송혜정	이송봉	지미선
전상룡	정정래	조은호	최덕호	최희수	홍준현	김정철	장명진	류길재	정승훈	황은경	김봉래	이주석	권형준	박영욱	유차상	최상중	김태식	이정윤	권순남	노혜숙	신귀분	이승희	지연옥
전상욱	정재용	조일홍	최동건	최희수	홍진구	김종길	전은호	류현정	정연규	황정호	김상도	이지은	김경섭	박성호	유천업	최양오	김해숙	이흥근	권용안	노희준	신동렬	이양희	진장호
전성인	정종원	조재연	최동민	최희준	홍창기	김형욱	정성훈	문행규	정창현		김석래	이진아	김귀호	박수정	유태영	최운용	김현근	전용범	권 혁	류미숙	신민선	이연숙	차성미
전성철	정주연	조재원	최동욱	추동균	황경복	김호현	장애리	박금해	조광환	☞시민권익센터	김선연	이호진	김상일	박수진	윤강원	최윤숙	김형기	전진대	권혁이	류정희	신복인	이영신	최경화
전용배	정준수	조점근	최영희	탁 민	황기명	나인수	정인환	박미라	조성아	☞대호관세사법인	김선정	이호숙	김상천	박수옥	윤길정	최은정	김형환	정병열	김경태	박경욱	신성은	이영희	최민교
전용일	정종식	조중철	최병오	표규열	황도수	노두승	조재형	박영희	주석부	김강준	김재부	장선애	김석준	박수옥	윤정미	최창식	김홍규	정병우	김경화	박계량	신윤철	이원영	최미영
전우영	정진민	조준범	최병호	하상준	황 민	노용래	최강림	박용주	차승주	김상현	김재준	전규화	김선심	박용안	윤종운	추현철	김홍기	정석호	김기영	박광수	신은숙	이윤식	최상철
전창호	정찬식	조준형	최봉문	하용호	황선용	도선봉	최두호	박용현	최우진	나태균	김중남	전영권	김수영	박추홍	이길중	한장용	류창열	정용길	김남현	박기은	신혜진	이재준	최철규
정경숙	정창률	조진만	최석준	하태주	황선원	류성룡	최명철	박은주	최윤정	박주승	김진숙	정석중	김수진	박태원	이민구	허원영	마태근	정진철	김남희	박미영	안경애	이중석	추규호





하숙례	김은영	박창기	이상걸	정진철	권순형	변정도	정제봉	김석현	<b>김포경실련</b>	조용문	김동일	박경옥	안종희	이지영	조정학	김영모	안기호	전영춘	김기권	명근홍	배근미	이정진	최경아	
한궁희	김인수	박창석	이상동	정찬용	권윤택	소평진	정진수	김연승	(주)티비그림(주)이비엔	조종석	김명혜	박동균	안화석	이진태	조진현	김영주	안남주	전혁구	김대근	모지환	배상기	이종화	최구호	
한창옥	김일호	박철웅	이상주	정행섭	길윤옥	신미정	정택균	김영희	조용석(명신한의원)	주현석	김무중	박동환	양대환	이진현	조찬호	김영희	안병진	정상희	김명숙	모창용	배영철	이찬식	최명식	
허기용	김재석	배용태	이상채	정현오	김경훈	신주식	정택동	김중수	(주)신원렌터카	채신덕	김문희	박동희	양원규	이진희	조창래	김 욱	안영찬	정예성	김명진	문세영	배철선	이춘엽	최병기	
허정호	김정훈	백상일	이상근	정혜련	김덕중	심재필	조경래	김창호	강명자	최일환	김민석	박병래	엄봉훈	이창용	주태환	김원희	안재준	정우택	김명철	문연철	백재봉	이평일	최연식	
허종은	김종하	백 석	이상길	정환규	김동욱	심정규	지대근	김희모	김남규	최재용	김봉표	박병준	엄인용	이태용	차진근	김응배	안종대	정인구	김문재	문영덕	백정심	이한경	최원수	
허창순	김진길	백영기	이승준	정환승	김동환	안세찬	최근애	문성익	김덕희	한성식	김상돈	박병호	엄희만	이해숙	채오길	김재경	안종훈	정진숙	김미주	문 응	백정애	이한중	최인권	
홍경미	김집중	백익순	이승훈	정환채	김문환	양남숙	최낙렬	박순열	김동규	한재혁	김상용	박승철	여우현	이형태	최동학	김재석	양우창	정현재	김민성	문준석	서미화	이형오	최 일	
홍진호	김창현	백종기	이 연	조교영	김보준	양진오	최연호	박영미	김문경	허우섭	김상진	박영식	여은상	이호석	최순철	김정기	여일구	정희대	김민희	민경준	서이채	이홍식	최재경	
황동식	김철현	변동철	이윤순	조성식	김봉교	엄상섭	표상욱	박정민	김미자	홍석만	김석태	박재범	여택동	이희동	최우곡	김제선	오성균	조성천	김민희	민찬홍	송미승	임일용	최종명	
황재연	김홍식	봉형균	이은방	조승유	김연고	오영재	허 진	박홍수	김영로	홍성도	김선왕	박종률	오철환	임종오	최은영	김중기	오원관	조유제	김상원	박강일	송영중	임종석	최현철	
<b>광주경실련</b>	김해룡	서민호	이인수	조재곤	김윤희	윤달근	홍화분	박희찬	김옥순	황인문	김선희	박종익	우대운	장석희	최종만	김중천	오종섭	조은호	김선미	박근영	송홍범	장안심	최홍림	
(재)우봉정학회	김현모	서상기	이재석	조형수	김은희	윤상훈	윤성석	<b>군산경실련</b>	석경수	김종열	김수원	박준상	우형택	장영규	최준호	김중하	오학석	조철휘	김선실	박근자	송희진	장은경	최환석	
(주)해안도시가스	김현석	선종아	이재원	주호연	김인순	김윤석	김민준	이관순	강왕근	성시규	김창집	<b>대구경실련</b>	김신호	김영권	김진중	김진중	우희창	진동규	김성두	박병철	신우기	전종국	하상복	
(주)영암마트	김현중	설상욱	이재윤	지명순	김인중	이관순	강왕근	성시규	김창집	김철경	(주)남캐리캐이스트	박진수	유성호	장은숙	최진혁	김진중	김중신	원용철	진동섭	김성철	박석일	신재범	전철균	한건준
버스조합	김효성	소병환	이정근	지병근	김재훈	마덕수	고계곤	심재숙	김철경	김형창	변호사김현익법률사무소	박판기	유왕근	장해열	최한석	김중신	원용철	진동섭	김성철	박석일	신재범	전철균	한건준	
강대욱	나병철	송광운	이정학	채욱진	김종율	이명희	고진곤	양진하	나기천	감 신	김용두	박한승	윤동섭	장호경	하영준	김태현	유인규	차정민	김소미	박성권	신주환	전철영	한경자	
강상호	노남수	송승중	이창호	천재영	김준호	이미경	김동근	오태화	남기후	강연환	김용찬	배기만	윤태우	장호열	하순화	김태형	육종근	최경훈	김수경	박성일	심재경	정대철	한상호	
강신주	노영필	송원식	이학균	천홍석	김준희	이미숙	김부영	유숙희	도현순	강호욱	김윤상	배영길	윤현식	전성훈	하중호	김태형	윤석원	최봉문	김성호	박성진	안영하	정명오	한승주	
강오일	노용주	송윤주	이형모	최동기	김진억	이병문	김영혜	유애순	류문식	고미정	김윤호	배은정	윤홍식	전성욱	한상우	김태호	윤여진	최창환	김신규	박세훈	양명희	정병수	한승현	
강은섭	류석렬	송태석	이형호	최영남	김진희	이상도	김재훈	이경숙	문태식	고재천	김재범	배진원	이강태	전영권	한상인	김태훈	윤주병	최정우	김영삼	박소영	양승희	정삼수	한태연	
강정미	류이중	신기환	임기춘	최용석	김철광	이성철	노치우	이경은	박경자	공영선	김정렬	백진일	이경란	전영선	현석한	김현하	윤태희	한경이	김영태	박승춘	양영주	정석우	홍건숙	
강훈열	류종희	신재안	임동훈	최주영	김현미	이수영	문영수	이광석	박병돈	공재식	김중도	변부형	이경탁	전영평	홍희청	김형대	이건희	한기평	김영환	박수빈	양진영	정승임	홍국선	
고은옥	류한범	신주환	임영범	최주영	김휘연	이시호	박은아	이상운	박영훈	곽덕환	김중웅	서정걸	이경화	전재호	황광석	김혜천	이계자	한명진	김예영	박소욱	양판승	정영주	홍근표	
공인주	류한호	심재훈	임종연	하성택	김휴진	이영애	박지숙	이상춘	백종일	곽동주	김중태	서정욱	이근원	전정기	황귀선	도남선	이광자	한성림	김용수	박승채	어성준	정원종	홍석준	
곽상희	마재필	안병주	임형철	한 샘	김희철	이원재	신홍섭	이선덕	신순철	구영수	김지현	서종철	이기훈	전형수	황락규	명율식	이광진	한영일	김 윤	박승욱	오승주	정준택	홍순길	
구희선	모현숙	안태욱	장시영	한신구	나효훈	이원희	심규만	이순애	심상용	권기억	김진숙	서창규	이노수	정경선	황정현	문경재	이문지	한정화	김정민	박영용	오정택	정진대	홍진표	
김경현	문정찬	양명희	장은진	한원정	노상진	이전도	원유환	이유설	심영섭	권기혁	김진호	석정태	이도현	정문정	황종숙	박상훈	이병승	한화교	김정아	박용묵	오정수	정총무	황대승	
김광영	문 희	양정규	장 익	허기석	라병희	이정건	이상균	이희재	안재범	권대우	김창수	성광기	이미정	정성운	<b>대전경실련</b>	박종대	이영수	황의달	김정주	박인철	유경생	정평국	<b>부산경실련</b>	
김기봉	민문식	양진환	정진호	허문수	류시건	이재수	이지수	임구원	양영재	권동일	김창완	성수환	이병화	정성호	강도목	박종석	이용훈	김중구	박정석	유광호	정혜수	(주)트리플에스엔에스		
김기홍	박경아	오경례	장형순	허 탁	박경삼	이종률	임용선	장순환	어중석	권오숙	김대선	손광락	이봉우	정순천	강태현	박준혁	이인세	<b>목포경실련</b>	김종숙	박정희	윤치솔	정호원	이청재(경성유업)	
김길현	박광복	오경서	전동환	홍기태	박상우	이창형	전강훈	정경조	오인순	권오준	김태우	손상호	이부용	정연욱	고제열	박희조	이재영	강남길	김종익	박종두	이난희	조미경	(주)부산관광호텔	
김남기	박남규	오승훈	전용준	황동현	박성도	이태동	정덕주	정대영	윤명자	권윤집	김태환	손상훈	이상록	정영모	곽영교	방영덕	이정구	강병국	김종호	박종석	이덕일	조상국	(주)경성에너지	
김남수	박병기	오지혜	전창주	황윤용	박순이	임은기	조성수	조용석	이금순	권휘동	김해철	손승안	이상용	정영은	구남혁	배동국	이정호	강병조	김창세	박종철	이도홍	조성환	(주)에스클	
김동준	박병일	오지홍	정광우	황인섭	박응도	임주석	최 응	조은정	이두열	기일형	김홍연	손해진	이상천	정재근	권오택	백미옥	이종범	강성태	김춘길	김준길	박주이	이명희	조수진	좋은데이
김미남	박상용	유 현	정두석	정보경	<b>구미경실련</b>	박정구	장문석	홍기원	주삼식	이선주	김강식	송순임	이상필	정재영	권철명	백정웅	이지영	강영태	김태중	박찬수	이문희	조영교	강경태	
김병철	박상원	윤두중	정보경	<b>구미경실련</b>	김요나단	박주영	장세광	차속희	이선화	이재홍	김경민	송영식	이상화	정창길	김건희	성기석	이창기	강제석	김태현	박찬수	이범수	조영교	강경태	
김성일	박성수	윤봉란	정석훈	강승수	박창재	장인철	<b>군포경실련</b>	최경용	이재홍	김국태	남윤환	신동만	이석형	정대완	김기수	손대근	이철은	강주천	김하성	박철수	이상권	조영석	강규성	
김수영	박수인	윤봉영	정석훈	강승수	박창재	장인철	<b>군포경실련</b>	최경용	이재홍	김국태	남인철	신명희	이선혜	정한영	김기오	송영환	이학재	고재구	김하현	박철수	이상로	조용호	강규성	
김양지	박양우	윤상영	정영훈	강신웅	박항숙	장종길	<b>군포위생(원성희)</b>	최종식	이정규	김대식	노영희	신영섭	이 성	조광현	김대석	송인걸	이해정	곽경배	김형석	박한호	이세현	조인수	강대영	
김영규	박옥란	윤영수	정용완	고영호	박형진	장준우	<b>력키빌딩</b>	하은호	이정수	김대진	노태훈	신홍권	이연재	조동환	김동선	신창호	이현호	권인철	김홍식	박혁진	이영춘	조준범	강미라	
김영길	박인철	윤원진	정원태	구자근	박희중	장훈성	곽윤열	한성수	이중기	김도영	류규하	심병철	이용세	조락현	김문영	신현진	장복수	김경옥	김희환	박현희	이유리	채성삼	강민석	
김영목	박종렬	윤재철	정은수	권구일	배인호	전재돈	국정아	호희국	이중준	김도한	류학근	심준섭	이장수	조영도	김병국	신희권	장형근	김경철	김광배	나지애	박혜진	이인수	천병식	강민수
김영범	박주훈	이경환	정일용	권 보	백승국	전호갑	김대욱	홍순권	정일환	김도형	맹일영	안영석	이정웅	조용원	김상환	신희영	장화식	김광배	노경수	박호빈	이재광	천재관	강민정	
김영환	박찬숙	이동민	정중현	권순서	백승호	정석광	김동별	황윤경	조승현	김동성	문인수	안정향	이종경	조인지	김영기	안광정	전문학	김광창	노경윤	박홍식	이재성	천현중	강병석	



강성권	김대래	김은숙	김훈태	박인호	서현수	신해경	윤석준	이유식	장준홍	정환중	최병근	숙초경실련	김소봉	박영중	양영희	이우진	진형배	강인선	김혜영	손형주	이용호	정희석	김원우
강성태	김 도	김인한	김희곤	박재본	서현식	신해기	윤석진	이은화	정지태	제희문	최병찬	통일재정임시 고령관	김승철	박문수	양해준	이재선	천성미	강희정	김현구	송기진	이운창	제진수	김중선
강승희	김동영	김인한	남경태	박재우	석승희	신행생	윤성미	이정민	장해욱	조경태	최보규	평화산업 전순득	김시형	박병훈	어주하	이재정	천성필	강희진	김현삼	송원찬	이원욱	조경두	김준선
강시영	김동호	김재만	남기찬	박재욱	석진열	신항남	윤수성	이정식	장희정	조광현	최부환	황보해용	김영석	박성진	엄경선	이재홍	최관식	고병익	김현태	신동섭	이원익	조규만	김준영
강예운	김영석	김재일	남영현	박재홍	석태호	신현무	윤재성	이정주	전명숙	조문선	최선숙	강동우	김영선	박성한	엄천수	이정하	최근석	고재정	김혜숙	신복용	이원재	조규호	김준호
강유창	김문규	김재찬	노경조	박정숙	선석렬	신혜숙	윤재철	이정향	전문식	조봉수	최선아	강석태	김영식	박수경	엄태영	이종섭	최길순	구자돈	김희용	신한미	이윤희	조병모	김지훈
강재현	김미향	김재훈	노상훈	박중덕	설광석	심미예	윤정선	이정호	전보익	조상희	최수미	강신길	김영호	박승민	박영덕	이종식	최돈환	권영두	나민수	심재광	이은주	조석환	김필래
강재호	김백철	김정각	노영욱	박중석	설동경	심상조	이갑준	이정환	전세표	조성렬	최수영	강영희	김영화	박영덕	오관영	이종식	최동권	권윤희	나태성	안혜영	이의봉	조승백	나창수
강정규	김범준	김정수	노일용	박중수	설동철	심성구	이강진	이정훈	전연숙	조실제	최승환	고석철	김원기	박영미	오광택	이종길	최동훈	권후남	남기석	양우혁	이재교	조영춘	박재현
강정성	김병곤	김정숙	도한영	박준순	설원출	심윤정	이경숙	이조경	전용배	조양래	최원석	고선창	김원일	박영희	오모현	이진여	최서호	김경수	남상덕	양재철	이재득	조재경	박제성
강주하	김병용	김정순	류강렬	박준홍	설호석	심재천	이경학	이종림	전일수	조영규	최은석	고영진	김유경	박용기	오승택	이진형	최선미	김경호	남창현	양진하	이재우	조형훈	박철우
강종묵	김병하	김정택	류위훈	박진성	성덕주	심형철	이귀순	이종석	전정표	조용언	최인한	고인선	김은중	박정권	오문택	이 철	최순철	김대성	남택진	염규용	이정원	조화윤	서용현
강태문	김복준	김정현	류종성	박진용	성민수	아영아	이규현	이종원	전진업	조용한	최재명	고종문	김은희	박정민	오홍철	이필순	최승명	김도형	노선희	예인기	이정하	주영훈	신현일
강필원	김봉국	김종구	모상선	박찬일	성병창	안기영	이남걸	이종철	전현수	조용현	최재호	공정관	김인섭	박종학	원선목	이호석	최애리	김동규	명홍진	오동석	이중령	지순이	오정록
강해상	김봉규	김종기	문영순	박창식	성영미	안도호	이남중	이종학	전호열	조유장	최정묵	곽병용	김일환	박종현	유성봉	임덕수	최영미	김동선	모성은	오성규	이중주	진승주	위미영
강현주	김봉수	김종민	문재천	박철중	성영희	안명석	이도준	이종화	정광수	조윤득	최정숙	곽중환	김재학	박희식	유영민	임정길	최용석	김동원	문서현	오세환	이주연	최문태	윤석미
강규성	김보이	김종우	문창호	박철한	손병열	안성관	이동률	이주환	정관영	조윤환	최종해	곽현욱	김정식	방대식	유영창	임중희	최유정	김말순	문승현	오완석	이주현	최영숙	윤형신
고명석	김삼문	김종철	민현선	박태순	손봉주	안영철	이동원	이준승	정 근	조은아	최현돌	길 목	김정인	변성수	유종완	장경민	최종현	김미옥	박기학	오일용	이진성	최영희	이금호
고수남	김상배	김종한	박경석	박태주	손상용	안원하	이동윤	이진수	정기섭	조재형	최해경	김 철	김정훈	변인미	유주희	장근호	최지문	김미정	박민철	오지현	이찬용	최인수	이복남
고인홍	김상호	김주영	박경주	박한규	손영일	안재민	이동진	이창희	정달식	조점이	최희원	김 철	김종윤	서관우	윤광훈	장명석	최진철	김민수	박선영	오해경	이창모	최진학	이상현
고재일	김석준	김주현	박관수	박현욱	손정환	안종일	이동훈	이춘구	정도영	조지혜	탁영민	김강석	김주란	서수원	윤수용	장성원	최춘파	김백규	박순례	우암미	이창진	최진환	이상휘
고정연	김석준	김주호	박대연	박혜정	손철홍	양동열	이동희	이춘성	정동만	조지희	하경민	김경석	김주철	서은진	윤재훈	장인환	최형덕	김석규	박승원	유재성	이판수	하순진	이욱기
공병승	김석호	김주희	박도영	박홍재	손치훈	양재화	이만수	이학봉	정동영	조철현	하나연	김경아	김준섭	석영환	윤재희	장재환	최해경	김석진	박윤환	윤귀현	이필훈	한국지	이종철
곽원병	김선년	김준기	박동범	박환진	송문숙	양종필	이영성	이현제	정명길	조현수	하상철	김기석	김지혜	소문섭	윤정은	장주열	최효섭	김성란	박은호	윤남근	이해균	한상율	이천오
구경희	김선미	김진봉	박동석	박희정	송순임	양지현	이영식	이현주	정미경	조혜숙	하주수	김기준	김진기	손경자	이건수	전영식	탁동철	김성연	박정화	윤두천	이현순	한옥자	이휴정
구명중	김선희	김진영	박두춘	방성애	송은주	엄세원	이영진	이혜영	정미영	조홍규	한기성	김남춘	김진태	손병섭	이건욱	전이령	한살림	김시영	박주영	이경섭	이효주	한창균	임승규
구주영	김성근	김진찬	박미순	방옥자	송재광	오상준	이미경	이훈전	정미한	좌정훈	한기성	김덕용	김진태	손재복	이검호	정병호	한상민	김안식	박준배	이국희	이희수	한풍교	장동식
구효송	김성권	김진필	박미영	배광호	송재은	오상환	이병호	이희길	정민경	주수현	한미영	김동수	김진희	송경희	이경상	정봉재	한성희	김영기	박현식	이근호	이희숙	허재구	정순관
권명섭	김성근	김철도	박민우	배덕광	송정숙	오영자	이상백	임무진	정순영	주안나	한병무	김동순	김천수	송영근	이경애	정성근	한정숙	김영래	박현웅	이금희	임채욱	허현태	정은희
권범현	김성길	김준덕	박복용	배성훈	송종두	오철조	이상은	임우택	정신모	주재민	한병철	김동완	김철수	송은희	이기원	정양언	함국기	김영일	박형순	이기홍	임해경	홍영호	조남훈
권수범	김성수	김태경	박봉수	배수미	송희준	오태석	이상진	임종수	정용수	지경아	한성안	김동익	김철환	송제철	이대복	정용주	함준식	김영중	박흥덕	이명욱	장래인	홍종수	조휴석
권오성	김성열	김태구	박상명	배유한	신경근	옥성애	이상득	임태연	정우루	지은아	한영수	김말순	김춘기	송훈석	이돈섭	정원모	허우린	김영태	방종복	이문근	장영욱	황민석	주지은
권오혁	김성춘	김태우	박상병	배종출	신군재	왕 인	이석주	임 호	정은주	진상표	한월봉	김명근	김춘삼	신대섭	이동균	정윤희	홍명관	김완동	배금란	이미경	장성근	황성우	한지은
권외분	김성호	김태희	박석동	배혜래	신만석	우도균	이선희	임호경	정재동	진수진	한재철	김문석	김태영	신종출	이문성	정은희	홍진희	김용철	김용호	이민구	장정오	황용원	홍상우
권태섭	김세한	김해룡	박석원	배화숙	신병훈	우명자	이설하	장경식	정재호	차동박	허갑용	김미경	김형걸	신창승	이병선	정진수	홍천동	김웅	백혜련	이병삼	장현주	안산경실련	
길태호	김수미	김현욱	박성수	백대영	신상구	우성철	이성권	장귀봉	정중석	차동욱	허욱경	김미녀	김호준	신창현	이병수	정진수	황시영	김인석	변수정	이성명	전정희	순원경실련	송바우나
김가아	김수자	김현재	박성철	변재우	신성진	우정용	이성렬	장금구	정중학	차진구	허 원	김미정	남상진	신현식	이상식	정호원	황영희	김재기	변영선	이상주	전희락	황인용신경과의원	강기성
김갑환	김순애	김형권	박성하	부두봉	신수진	원상순	이성림	장동범	정중화	채중현	허진욱	김병욱	노금희	신홍사	이상정	정홍기	황은숙	김정희	서경희	이상해	정계화	영신창업투자㈜	강정미
김경민	김시현	김형균	박성호	서경국	신승균	유상일	이성현	장문숙	정지원	천상수	허해녕	김봉준	노철호	심연흠	이상호	조광덕	정윤기	김중석	서상범	이성호	정민자	백제스치로플	경창수
김경일	김쌍우	김형수	박승갑	서무건	신영호	유완식	이성훈	장문경	정진교	천용욱	홍경자	김성기	동병희	심윤자	이수영	조명수	수원경실련	김중선	서수정	이성희	정성균	현고(임승남)	고미나
김경조	김영관	김형천	박승제	서범수	신용삼	유재엽	이성희	장봉주	정창성	천정호	홍일표	김성일	리용일	안경민	이승재	조선헌	김종오	김직란	서 환	이승호	정양훈	통일철물	고영인
김경택	김영길	김해경	박시우	서봉원	신용현	유재중	이승호	장성호	정준희	초의수	홍종인	김성권	문재용	안경자	이연우	조성열	조현국	강민철	김철환	서흥석	이영재	정지홍	김성명
김경화	김영욱	김해경	박연수	서성희	신유천	유정동	이영갑	장세규	정치금	최거훈	황국자	김성준	박근철	안종원	이영순	주영래	강유정	김종관	성현구	이영주	정태정	김성준	김경숙
김광식	김영주	김혜연	박영봉	서수금	신임균	유종석	이영신	장영철	정래영	최경윤	황영식	김성근	김성준	안종원	이영순	주영래	강유정	김종관	소일호	이영주	정태정	김성준	김경숙
김광희	김용원	김호범	박용주	서양수	신정희	윤강훈	이영호	장윤석	정하윤	최남연	황인구	김수정	박덕희	양언석	이우영	주영현	강유정	김종관	소일호	이영주	정태정	김성준	김경숙
김남식	김원태	김홍재	박용하	서중석	신철성	윤남열	이욱형	장은선	정한성	최달웅	황일준												
김남일	김윤영	김홍희	박용한	서창근	신총기	윤상미	이위덕	장재구	정해균	최민식													





김경욱	박창숙	이주옥	김규민	이홍록	권진형	김성국	김종복	문승옥	배경희	심형모	유승열	이백선	이정형	장경자	조성숙	최은실	홍경아	김관호	김재경	박태선	우수홍	이종일	정훈교
김기범	박태순	이창수	김대우	임승기	권혁봉	김성길	김종원	문연래	배재준	안미숙	유연태	이보연	이종승	장교환	조성화	최은희	홍성동	김광업	김재식	박한정	유동현	이주영	정희윤
김기회	방은경	이천환	김동운	장영달	권혁양	김성애	김주생	문천만	배정수	안병운	유영숙	이복수	이종원	장동찬	조연숙	최인근	홍원표	김광호	김재영	박현수	유정운	이주희	정희정
김대영	백영국	이필상	김동현	전재현	권혁중	김성완	김지혜	민승례	배증열	안봉섭	유원문	이복우	이종한	장세웅	조용필	최인식	홍은하	김균률	김종길	방만근	유진성	이준한	조광희
김대일	서근식	이희대	김명숙	정남운	권흥석	김성재	김진수	박경룡	백승민	안신실	유재경	이부경	이주운	장여진	조정래	최인자	홍종민	김근수	김종욱	방정환	유창민	이종량	조난주
김동인	서정열	이희연	김민섭	정연준	권흥석	김세동	김진수	박경미	백응기	안재영	유재순	이상년	이준호	장영란	조정숙	최재화	황경애	김기범	김종화	배승휘	유홍성	이진숙	조동암
김명연	서혜경	임명자	김선자	정주영	금청하	김수동	김진숙	박기현	변영구	안정민	유재춘	이상원	이종재	장영안	조종성	최정관	황규문	김기한	김준우	배철현	윤관욱	이천우	조용철
김미경	석진성	임수정	김양수	조민숙	기보중	김숙현	김진숙	박기환	변정해	안창호	유태우	이상은	이진관	장영안	조철현	최정숙	황규문	김남돈	김진영	백동수	윤대기	이창숙	조용화
김민	성준모	장기준	김영범	조춘선	김 준	김순업	김진영	박대영	변정해	안철한	유학선	이상태	이진혁	장왕영	조춘순	최정화	황인동	김대중	김진희	백민섭	윤동구	이창훈	조인숙
김병재	손상경	장동일	김동준	최갑주	김갑용	김순업	김진용	박명순	부태길	양광모	유혜란	이상혁	이천우	장원섭	조택선	최 종	황인재	김덕중	김차중	변성준	윤영철	이철준	조자영
김복희	신광재	전준호	김의도	최영식	김강산	김승민	김진창	박명철	빈종진	양재란	윤광석	이석환	이창규	장원주	조택선	최 종	황현숙	김동완	김창문	서경욱	윤미경	이한용	조현근
김상혁	신남균	정승현	김주남	최창규	김경건	김연희	김진천	박병건	빈종진	양정분	윤남선	이 선	이창수	장재훈	조한영	최중섭		김동우	김창우	서부길	윤지희	이행숙	조현준
김성봉	신동국	정안철	김중기	최 탁	김경률	김영근	김진천	박병대	서성원	양희진	윤남용	이선미	이창수	전미숙	주상운	최중성	인천경실련	김동호	김태호	서용성	윤 호	이현경	조희선
김안식	신윤관	정연주	김진영	한상룡	김경림	김영대	김창균	박상욱	서순희	여경숙	윤미애	이선정	이천수	전상진	주상운	최중악	한국연미노동조합	김두영	김태훈	서원경	윤희택	이형구	주영선
김영숙	신정환	정용기	김찬기	허여령	김경자	김영은	김창수	박상용	서원교	여덕경	윤수영	이성규	이철희	전성호	지소연	최주옥	인천녹색환경지킴센터	김명석	김하운	서정환	이강훈	이형수	지영일
김영희	신창하	정은수	김창아	홍성현	김경중	김영은	김춘자	박상임	서은숙	어윤식	윤수영	이성훈	이춘석	전영석	지응구	최준봉	인천영이엔지-최준옥	김명재	김학소	서주선	이경진	이희광	진유성
김윤재	심규호	정은식	김햇님	홍순성	김경화	김영자	김태진	박상철	서재호	엄기홍	윤순성	이순창	이종일	전영애	지정철	최현숙	민주노동인천본부	김미아	김현식	서태원	이귀복	이희숙	차광윤
김윤희	양근서	정은혜	김후승		김경희	김영자	김학경	박선규	서정순	엄주연	윤준호	이승남	이종환	전의수	지효숙	최현희	인천북합은송협회	김미현	나영우	서한희	이기원	임강민	차득기
김제동	양태호	정정순	맹주철	이천여주경실련	김광수	김영준	김학재	박선영	서혜주	엄태준	윤태범	이승현	이태용	전홍구	진선중	하맹수	사단법인무지개	김병우	나종팔	서해동	이기태	임병구	최광용
김종길	양현석	정주호	박민기	한국전력	김광수	김영찬	김학훈	박성희	서희숙	엄태준	윤태범	이양순	이판용	정계화	진용상	하태길	도영운수(주)	김병철	나중훈	석 일	이길성	임재훈	최광은
김지영	연창희	정진욱	박상혁	강경모	김광식	김영철	김현미	박수자	성주영	엄태희	윤향숙	이영구	이학수	정선옥	차동환	한덕이	강경하	김상섭	남세종	성덕규	이도희	임희숙	최두영
김진희	오관영	정철욱	박수환	강석림	김광인	김영춘	김현숙	박양래	성희연	엄희용	윤혜숙	이영실	이한표	정선옥	차동환	한덕이	강대준	김상열	남영우	성사용	이동기	임희진	최병길
김창모	오은석	제중길	박수형	강승균	김금녀	김영학	김형식	박옥선	손경자	여재혁	윤희동	이영우	이해철	정성기	차준은	한덕이	강덕우	김선홍	남종희	손장원	이동현	정영현	최병윤
김창하	오정순	조경래	박현일	강식근	김기석	김예론	김호열	박 인	송경은	여현수	윤희태	이영현	이현정	정순현	채욱희	한돈집	강명선	김 설	남지승	송경희	이루다	정일진	최상희
김철진	오진호	조민철	배만병	강신욱	김기열	김옥자	김홍태	박인오	송병광	오근철	은종원	이영훈	이현희	정승수	채홍철	한만준	강명선	김성근	남창섭	송원덕	이린우	정정민	최수진
김초환	옥민석	조안호	서동일	강영애	김기은	김왕곤	남경래	박일엽	송영득	오금석	이강문	이옥희	이현희	정윤희	천기영	한상화	강명수	김성수	남홍우	송인선	이문의	전동춘	최순자
김춘호	왕은희	조충현	성종규	강정순	김기태	김용식	남기태	박재선	송영득	오동석	이강수	이용근	이형하	정옥형	천병기	한상화	강상곤	김성수	남홍우	송인선	이문의	전동춘	최순자
김현삼	원미정	주만수	송명원	강지혜	김길홍	김용태	남오철	박재우	송은주	오명환	이경수	이용연	이호돌	정유리	천재영	한순택	강석철	김세훈	도지성	송창섭	이병철	전영우	최영만
김현호	원호식	최경숙	신경희	강창영	김남수	김우재	남오철	박전희	송이식	오병재	이경수	이용연	이호영	정윤지	최광식	한연숙	강선옥	김수만	류권홍	송한철	이상동	전용성	최윤지
김형욱	윤상민	최복수	신순봉	강태희	김남수	김운경	남용대	박전희	송정호	오석호	이경호	이우정	이호일	정윤희	최근우	한영옥	강승진	김승남	류병희	신병철	이상영	전우진	최인용
김혜숙	윤석용	최윤정	안경모	고경애	김대록	김용제	남천우	박정하	송준규	오성순	이경화	이운용	이 훈	정은영	최낙수	한은상	강옥엽	김연옥	류제홍	신영은	이상용	정규식	최장열
나정숙	윤성용	최은채	엄숙자	고옥자	김대축	김은미	노연상	박정화	송혜진	오성용	이광석	이원희	이희상	정은희	최대규	한은상	강정호	김연옥	명선목	신은철	이상진	정기호	최정자
남승하	이갑순	최임이	여병찬	고윤지	김두환	김은이	노재덕	박종구	신계영	오세린	이광세	이윤숙	임명원	정인우	최동규	한인경	강태경	김연중	민근홍	신종화	이상한	정낙식	최정철
도원중	이갑숙	최재림	여현정	고인정	김만석	김은하	노필순	박종우	신덕선	오주한	이광윤	이은상	임상열	정일구	최두열	한재수	고덕봉	김영구	민대운	심정순	이수명	정두용	최준혁
류영숙	이경란	최현수	오성탁	공미선	김만식	김의섭	노필영	박종욱	신동신	오형선	이광재	이은상	임선미	정진용	최명섭	한정민	고재성	김영국	박기욱	안경수	이순복	정미경	최찬용
문연숙	이경석	하혜경	윤중대	구경혜	김명사	김인기	노필원	박준모	신동윤	우근배	이광호	이은자	임성규	정진학	최명옥	한정현	고정규	김영수	박상필	안동찬	이애경	정석환	최 현
박경중	이근미	형천호	이광우	구준모	김미자	김인옥	류교윤	박창근	신동천	우순애	이교관	이의성	임성식	정춘화	최병률	한준학	구자길	김영준	박상희	안병준	이연숙	정선오	최화영
박경태	이미숙	홍정표	이동준	권광일	김미혜	김재임	류시근	박창근	신두임	우순희	이구현	이이슬	임승한	정하국	최병주	한준호	권경자	김용구	박석민	양의동	이용우	정순학	최효숙
박기욱	이미숙	황병노	이영규	권기창	김병수	김재홍	류종관	박창렬	신영호	우종만	이기훈	이익재	임영길	정하근	최병탁	한준희	권남구	김용민	박성은	엄연주	이의재	정원경	한대수
박동신	이민근	황연화	이상경	권순원	김봉덕	김정범	마상호	박태문	신완재	우현녀	이길수	이재범	임은혁	정혜순	최복순	한희자	권미정	김우경	박성인	엄연주	이의재	정원경	한대수
박상근	이병욱		이상민	권순원	김상실	김정분	마석홍	박태문	신종욱	원광식	이길윤	이재성	임자희	제영기	최상동	허 립	권오경	김원화	박수영	엄용수	이인철	정은식	한두현
박상호	이상현	양평경실련	이상수	권영미	김상훈	김정수	마석홍	박형국	신종욱	원용자	이길윤	이재용	임철만	조경국	최성원	허범식	권용희	김윤태	박옥희	여승철	이일희	정재영	한만승
박은호	이선희	강병국	이수진	권영진	김선우	김정옥	마세진	박홍재	신종화	원종수	이대현	이재희	임철재	조계만	최영옥	허수행	권정호	김은경	박용해	여정주	이재필	정진수	한용우
박종숙	이숙경	강신우	이영주	권영훈	김선일	김정진	마애진	박희자	신철승	원종순	이동현	이재희	임철재	조길문	최유명	허임범	김갑봉	김은영	박정훈	오경환	이재학	정진오	함지현
박종호	이신정	고승일	이웅열	권오섭	김선희	김정진	목현실	박희자	신해진	유경윤	이명신	이정길	임한권	조남술	최용철	허임범	김경원	김은용	박준용	오병집	이재훈	정창훈	함창학
박준연	이용천	구민진	이의협	권오주	김선희	김정천	문미자	반기숙	심관보	유상열	이미희	이정숙	임혁빈	조병돈	최용환	허준환	김경태	김은철	박진석	오원선	이정림	정태원	허선규
박창수	이정아	김경희	이제두	권오진	김성국	김정희	문석기	방미연	심규대	유상희	이박우	이정숙	임희옥	조성복	최용환	현주섭	김계원	김의복	박찬대	오태훈	이정윤	정형진	허우범



허창희	오상현	김 현	고영수	변정철	홍순민	정사식	박종갑	정하진	서울고속(주)	김광수	김영환	김태형	민승기	박철석	송의천	연광석	윤정숙	이숙애	이철중	장호진	조국현	최태호	김병철
홍옥표	유창엽	김형보	고영식	부상원	홍용의	제재영	박종복	조강석	씨투넷(주)	김광직	김영희	김태희	민옥순	박춘섭	송일근	연구순	윤진현	이순남	이철희	정홍원	조규호	최현숙	김석중
홍유나	윤철웅	문선대	고재우	송대영		조양래	박태서	조영주	청주YMCA	김광희	김용국	김필제	민준형	박학준	송재경	연구용	윤찬열	이순철	이철희	전광호	조동순	최형도	김선배
홍인식	윤태영	문정수	고재일	송석언	<b>창원경실련</b>	조준희	박현희	조인순	제천교통	김교선	김용석	김학민	민정식	박해덕	송찬주	연방희	윤태한	이순호	이한훈	전년규	조상현	최호균	김순옥
황수연	은영주	박래수	고정윤	송승호	강권식	주성주	서규석	조하심	청주KYC	김국환	김용승	김학실	박경수	박행자	송필수	연영규	윤한식	이승준	이항미	전병선	조성구	표한홍	김승현
황용선	은용우	박영민	고태식	신용현	강동석	최정현	서상옥	조호익	(주)세일	김규설	김용애	김한경	박공규	박호표	송혜근	연영태	윤호영	이승철	이현수	전세식	조성오	풍경섭	김용재
황제우	이기화	송민수	기태선	안영철	강태욱	최팔호	신동현	주홍중	강대성	김대중	김용규	김현미	박관주	박희분	송희상	연철흙	이경순	이애자	이현수	전용렬	조수종	하옥란	김정현
	이민호	신현기	김경용	양문석	권대용	하영기	안신용	차준희	강 민	김동암	김유미	김현상	박구원	반영운	신경운	염봉순	이광용	이연옥	이현식	전용표	조승연	하재성	김종범
<b>전주경실련</b>	이서경	심요섭	김근택	양봉석	권재길	허효창	양승조	최경식	강민오	김동욱	김유호	김현숙	박근수	반영일	신국희	오명진	이광희	이영숙	이현주	전우석	조원영	한기억	김종식
	강원규	이승현	안길만	김기훈	양성국	김병섭	오수균	최석남	강성래	김동진	김은옥	김현숙	박근수	배관희	신규식	오복수	이귀형	이영진	이형각	전재복	조용숙	한동훈	김평안
	강호수	이 정	양현택	김남혁	양시경	김성욱	<b>천안아산경실련</b>	오수균	최석남	강성래	김동진	김현주	박기번	배병기	신동선	오석송	이규선	이옥규	이형우	전진택	조은기	한상화	김한택
	곽이구	이현희	유사현	김대호	양우선	김영희	강민숙	오승화	최석림	강승범	김두호	김형근	박기환	배상은	신명섭	오수희	이규호	이옥인	이형찬	전창해	조윤행	한수환	김해경
	곽홍규	임영진	윤균상	김동욱	양형택	김정한	강인영	오인철	최신수	강신영	김명배	김형래	박남순	배응환	신명자	오연경	이근식	이윤범	이형택	전희택	조은애	한은례	김희성
	권대규	임성진	이상길	김동진	오승용	김종삼	강태윤	우승윤	최창환	강영미	김명수	김홍구	박동구	배중서	신범식	오영미	이기만	이은희	이화련	정교순	조을선	한인섭	남형우
	김관성	전기환	이성실	김봉석	오영익	김종운	강필호	유병국	하중률	강은희	김명자	김홍성	박명규	백선행	신성일	오영애	이기정	이의성	이효숙	정 균	조이현	한정현	박경철
	김대기	정구영	이용관	김봉철	오영환	김진철	강희두	유진영	한광수	강진성	김문옥	김환국	박문희	변광섭	신승수	오태진	이대영	이인구	임건철	정란희	조정식	허석렬	박대진
	김만식	정상권	이원직	김봉희	오정훈	김치득	고병현	윤건호	한문식	강현구	김문중	김황래	박미영	변민수	신승주	우상동	이대응	이인우	임규찬	정미화	조항진	허성만	박도수
	김병석	정세운	이창희	김부찬	유덕현	김한숙	고영술	윤권중	허 영	강호문	김미숙	김희수	박민순	변상태	신승진	우장영	이동로	이일만	임근수	정병숙	조현상	허 영	박미현
	김상원	정연택	임영관	김 석	윤영부	김형석	구분영	윤서희	허종일	강호승	김미희	김희식	박범혁	변성호	신영규	우정순	이두영	이일우	임기수	정상섭	조형규	허장권	박상규
	김세민	정인호	임호성	김석범	윤용택	나선애	구자형	윤일규	황종현	경준용	김민호	나채경	박석현	변성민	신영희	원광희	이만형	이장한	임기중	정상신	주서택	한상주	박정근
	김수환	정태원	전영렬	김성수	이숙희	나태연	김경은	윤정섭	황천순	고영규	김백규	남기상	박석현	변의수	신옥희	유광식	이맹원	이장희	임동현	정상욱	주성규	현 진	박형일
	김여진	조선환	차은호	김성준	이용민	남정호	김기태	이경숙		고영재	김병우	남기현	박성호	변장섭	신용재	유근수	이명관	이재덕	임성진	정상완	주재규	형미희	방영열
	김용권	지은숙	최성열	김세걸	이정민	도춘석	김길년	이규희	<b>청주경실련</b>	곽규은	김병의	남대우	박세웅	봉원진	신태경	유선우	이명순	이재영	임성총	정상완	주재현	홍강희	방수미
	김용휘	진정현	최종범	김수연	이창휴	문지영	김미경	이명근	광동철	김봉일	김정웅	남성욱	박연석	서길용	신평희	유성훈	이명호	이재영	임용수	정성희	지동규	홍경선	방수진
	김정길	채소옥	한태석	김승필	임숙자	박기문	김미경	이병덕	광승호	김봉주	김정일	남종순	박연수	서대석	신현식	유순영	이명훈	이재원	임용현	정세웅	지 민	홍석원	배은숙
	김정호	최문희	김승훈	장원석	박용주	김민수	이상일	이상춘	광창록	김상무	김정초	노근호	박영순	서영희	신희숙	유영경	이미남	이재은	임윤희	정승희	지상오	홍성학	변용환
	김종원	최종렬	<b>제주경실련</b>	김시영	정상철	박해진	김봉미	이상춘	구남희	김상수	김정태	노영민	박용석	서완석	심규석	유영숙	이미화	이재춘	임은정	정연숙	지의경	홍성학	변자용
	김주희	최진희	강경희	김양보	정선태	서정열	김상관	이서영	구안서	김선희	김종구	도선봉	박용연	서용원	심상학	유영아	이민영	이정규	임의순	정영래	지현성	홍승표	석영기
	김 준	하광호	강금중	김영아	조남섭	서정호	김세곤	이선열	권경미	김성수	김종기	류규식	박익규	서우석	심수영	유인봉	이배근	이정석	임일남	정영섭	진경수	홍우표	손현기
	김판용	하덕철	강민정	김영희	조문수	송태종	김 연	이수현	권미경	김성천	김종철	류근모	박인기	서준철	심영미	유일수	이범구	이정수	임일수	정영희	차중범	홍용표	송창근
	김혁수	한재덕	강성중	김용범	조부연	안동규	김종문	이승열	권성안	김수열	김종태	류근윤	박인숙	서효석	안병대	유재일	이범석	이종섭	임재경	정우영	채영순	황경수	신길호
	나윤환	황병해	강인창	김원규	조시중	예규현	김진태	이종필	권수복	김숙자	김주복	류근필	박인자	석명용	안성호	유주하	이병관	이종섭	임재규	정은희	채희관	황동훈	신혜숙
	노병문	황선주	강지용	김원삼	좌광일	오희석	김철수	이철호	권영기	김순구	김주환	류덕환	박재관	석 준	안양수	유철웅	이병권	이종수	임재일	정인수	최각규	황락훈	심재삼
	박규만	강창균	김익태	한남석	윤선한	김태명	장기수	장기수	권오건	김순영	김준경	류연욱	박재익	선종렬	안영숙	유철호	이병호	이종실	임지은	정일기	최경호	황선건	안봉진
	박명수	<b>정읍경실련</b>	강태운	김민영	한영조	윤종도	김행조	장영수	권태성	김순천	김준기	류우열	박종관	설경철	안장현	유행열	이복순	이종욱	임차남	정일택	최광민	황성주	안호춘
	박명진	고광호	고광희	김정수	한용환	이상호	김혜영	장원철	권혁상	김승효	김준년	류재문	박종률	성기남	안창만	유현덕	이상규	이종윤	임한빈	정재량	최대철	황영미	양태식
	박성근	고남용	고권만	김지연	한철자	이영길	김홍원	장재식	김갑용	김안식	김준수	류재형	박종서	성주우	안치석	유현철	이상복	이종한	임한수	정정필	최명섭	황희연	용성중
	박양림	고세창	고내수	김창기	한재철	이영희	김홍철	전오진	네모토 마사즈미	김강일	김준태	류재호	박종선	성환용	양계인	육미선	이상수	이주봉	임현경	정진아	최상영	용성중	
	박호민	김선일	고동철	김창순	한정훈	이이형	나아란	전종한	공공디자인아름	김건도	김진철	류진호	박종순	손세원	양기정	육종길	이상욱	이주선	임혜숙	정진아	최성희	<b>춘천경실련</b>	유영호
	백종철	김용복	고병기	김창연	한철호	이재관	남명희	정미영	녹색청주협의회	김경자	김진태	류학천	박종천	손양호	양기준	윤건영	이상중	이주형	장경석	정진원	최영선	춘천상공회의소	유재원
	송약용	김용철	고보선	김형진	현경호	이재철	노덕우	정미주	리드산업개발(주)	김경호	김창한	류현숙	박종혁	손호진	양미선	윤관수	이상준	이준수	장남운	정진하	최영중	고대규	윤장혁
	심동희	김은정	고봉석	박만용	현영철	이지영	노순식	정병웅	충북교육발전소	김계승	김천식	맹석주	박종희	송길화	양승예	윤기용	이선순	이종섭	장동대	정 철	최은침	권용범	윤재경
	안수현	김일중	고봉수	박석연	현용택	이진철	류임상	정병인	충북상인연합회	김계욱	김 철	명정희	박주호	송만호	양찬섭	윤명숙	이선우	이종원	장병순	정훈선	최은실	김광배	윤학로
	안영미	김재오	고성봉	박시환	현중철	임태진	류지현	정운양	법무법인 주성	김광남	김춘희	문성오	박진우	송봉화	양철호	윤병희	이성민	이종현	장병희	정현수	최재국	김기남	이관행
	안정훈	김진평	고성봉	박오범	현창석	장석운	맹창호	정운세	에듀크리안트	김광렬	김태성	민경익	박찬병	송선호	엄경출	윤승현	이수영	이지명	장영건	정희승	최진완	김남철	이복연
	양영희	김택술	고승한	박종규	홍광일	장의경	명진아	정재교	두꺼비친구들	김광범	김영호	민병준	박철규	송영환	엄응구	윤정수	이수한	이창훈	장재봉	조경주	최충진	김대영	이상섭
	엄상섭	김 현	고영미	변대근	홍성화	정성동	박민숙	정치화	충북시민재단	김광복	김영환	민병준	박철규	송영환	엄응구	윤정수	이수한	이창훈	장재봉	조경주	최충진	김대영	이상섭



이상철	전양호	함태성	공영서	김성희	김대진	손종수	이미아	이정미	정은미	최재봉
이석원	전운성	함형주	구지옥	김수구	김태헌	손진찬	이무현	이정훈	정태문	최재용
이승준	전호성	황덕호	권부혁	김시경	김태희	송희연	이상민	이준희	정혜영	최정식
이원규	정의성	황혜숙	권오일	김용갑	김현실	안창한	이상윤	이지은	정 휘	최태열
이은영	정지만		권태훈	김원우	김현철	양기정	이세환	임미진	정희철	태평초
이인배	정종교	<b>포항경실련</b>	김대영	김은정	김현표	오호창	이수열	임영숙	조동욱	편도선
이인섭	정휘돈	전(인포경제기획연맹)	김동완	김익태	김현희	우홍인	이시우	장병화	조서원	하승환
이종민	조성모	(주)케이알티 조규용	김동환	김장수	나창호	유성찬	이영철	장성숙	조송이	한상복
임재선	조성자	백민석일식집(임영숙)	김무영	김재석	남승국	유재준	이우년	장정선	조용석	허태구
임재선	진장철	화일산기	김문규	김정혜	박문태	윤혜정	이욱재	장태윤	조은경	
전규호	최영진	(주) 박의룡	김미경	김종윤	박상조	이경식	이운용	장현수	조인호	
전근우	최종익	해광스님	김보람	김준태	박 일	이국희	이원탁	전극중	주해남	
전동준	최희수	황보원주	김봉만	김진두	박정환	이규은	이은실	전장곤	지승익	
전만식	하상준	강용호	김상수	김진순	박태승	이동철	이익창	전정렬	최홍수	
전성휘	한희민	강창성	김성예	김태석	서윤기	이동훈	이재학	정우영	최병문	

##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기획·총무팀	741-8566	사무처장 : 윤순철, 부장 : 채준하, 간사 : 오세형
회원·홍보팀	744-0400	간사 : 정지영, 심재석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 김한기, 간사 : 최예지, 이학린
정치사법팀	3673-2145	팀장 : 김삼수, 간사 : 유애지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 남은경, 간사 : 정택수
국제팀	766-5623	간사 : 이현아
부동산감시팀	766-9736	팀장 : 윤철한, 간사 : 윤은주

국책사업팀	766-5628	부장 : 최승섭
(사)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팀장 : 권오인
(사)경실련통일협회	766-5624	간사 : 홍명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766-5627	팀장 :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3673-2146	팀장 : 이기웅, 간사 : 권태환
소비자정의센터	765-9732	간사 : 박지호
월간 경실련	766-5629	이사 : 음유정, 김용재

##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b>광역시</b>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 김기홍, 부장 : 강경민, 김세헌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 조광현, 부장 : 최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 이광진, 협동처장 : 차정민, 국장 : 이현호
부산경실련	051-761-3951	사무처장 대행 : 이훈진 부장 : 윤정선, 팀장 : 김미라, 배성훈 처장 : 김승원, 국장 : 최해자, 김선희
인천경실련	032-423-2950	
<b>경기·강원권</b>		
경기협	031-253-2266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 허정호, 부장 : 허창순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 오은정
수원경실련	031-253-2266	정책실장 : 노건형, 간사 : 유병욱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 김경민, 부장 : 고선영, 간사 : 최윤정
안양 의왕경실련	031-443-6730	처장 : 김성균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 이종준, 간사 : 황인순
이천 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 주상운, 간사 : 변정혜
강릉경실련	033-645-0828	국장 : 심현실
양평경실련(준)	070-8362-2147	국장 : 최갑주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 김경석, 부장 : 김경아
춘천경실련	033-636-6631	처장 : 권용범, 간사 : 오연옥

<b>충청권</b>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 정병인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 최윤장, 국장 : 이병근, 부장 : 신명자, 간사 : 신명수
<b>경상권</b>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 이양식, 간사 : 박희자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정책위원장 : 이지영, 국장 : 오정한
경주경실련	054-773-7851	국장 : 이원희, 간사 : 방현주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 조근래
포항경실련	054-278-4637	국장 : 장정선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 김유길
<b>전라·제주권</b>		
순천경실련	061-751-9993	국장 : 이상휘
여수경실련	061-643-2110	처장 : 박효준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 김창모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 최기자
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 한병규, 간사 : 권미경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 김은정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 좌광일